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

2020. 6. 19.



행정안전부

목 차

I.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 개요	1
II.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 계획	2
III. 제안 공모 결과 및 목록	4
IV. TF 운영 방안	13
V. 1차 검토 결과	17
VI. 국민제안에 대한 부처검토 결과	29
[참고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개요	47
[참고2] 우리정부의 OGP 활동 현황	49
[참고3] OGP 국가실행계획 수립 요건	50
[참고4] OGP 참여와 공동창조 기준	51
[참고5] 제1-4차 국가실행계획 과제 목록	53
[참고6] 지난 계획수립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56
[참고7] 캐나다 2018-20 국가실행계획 개요	57
[참고8] 국제동향 및 해외사례	58
[참고9] 대한민국 정부의 의장국 비전선언문	60

1.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개요

□ 개요

-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등 열린정부 과제를 담은 2개년 범정부 계획
- 국제협약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는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각국 정부의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자는 오바마前 미국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로부터 시작
- OGP는 78개 회원국의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이행·성과를 평가

□ 수립 요건

- OGP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국가실행계획을 공동 수립·이행
- 정부·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보
- 개방·반부패·시민참여·ICT 활용 등 열린정부 가치에 부합
- 구체적이고, 이행 정도가 측정 가능한 공약 10~15개 확정
- 정책 개선 이상으로 파급력이 있는 도전적인 과제를 높게 평가

□ 국제 동향

- 개방·반부패·시민참여를 추구하는 기본가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던 것과 달리 **광범한 분야·과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 OGP는 열린사법·시민영역·여성·포용을 주요 분야로 선정
 - 주요공약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수익소유권, 열린계약을 꼽음
- **열린정부 주체에 대한 해석도 빠른 속도로 확장**
 -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의 주체도 행정부에만 국한하지 않고, 입법부·사법부·지방정부의 참여를 강조

2.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 계획

□ 개요

- (배 경) 국제협약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회원국은 열린정부 과제를 담은 2개년 국가실행계획을 시민사회와 공동 수립해야함(권고사항)
- (수립 기간) '20년 3월 ~ 8월(6개월) ※ 이행 기간: 2020.9월~2022.8월
- (분 야)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등 열린정부 가치와 관련된 정책 분야
- (권장사항) 정부·시민사회가 공동으로 15개 이하 도전적인 과제 수립
※ 민관협약체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주도로 제4차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함

□ 추진 방향

- 열린정부를 이끄는 OGP 의장국 역할에 걸맞게 모범적인 계획 수립 및 국제적인 노력 주도
 -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공동창조(co-creation) 강화
 - 정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함으로써 숙의를 통한 계획 수립 과정 공동 수립
 - 참여 통로 다양화와 국민참여의 효능감 제고를 중점으로 수립
 - 포럼 정부·민간위원 외에도 다양한 민·관이 참여하는 계획 수립
 - 정부혁신 과제를 추진하는 중앙기관의 참여 확보
 - 국제적으로 부상하는 주제를 담당하는 기관 섭외
- ※ 예) 참여예산(기획재정부), 여성참여(여성가족부) 등

□ 수립 절차

단계	1단계(1~2월)	2단계(3~5월)	3단계(6~9월)	4단계(9월)
목적	추진체계 구축	→ 제안 공모	→ 과제로 숙성	→ 계획 확정
계획	① 민관TF 구성 계획 (기획·디지털개방·반부패·재정투명성·참여사회적가치) ② 아이디어 공모 방안 개발	① 정부·시민사회·대국민 아이디어 공모(1개월) ② 분류 및 1차 검토	★4차 계획과 차별성 ① TF 및 분과 구성 ② 제안을 이행 가능하도록 숙성·발전 ③ 최종과제 선정 ④ 정부·시민사회의 초안 공동작성	① 초안 공개 논평(2주) ② 의견 수립 ③ 최종 계획 작성 ④ 최종 계획 확정 ⑤ 번역·발간(9월)

□ 수립 일정

일정	내 용	주 관
1월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 기획	혁신기획과
2월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 기획안 확정 (중점분야·일정·절차 확정)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3월	정부·시민사회·대국민 아이디어 공모(1개월) (온·오프라인 활용 인식 제고 행사 수시 개최)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 행정안전부(정부) - 민간위원단(시민사회·국민)
4월	제안 취합 및 분류	기획분과 (행정안전부, 코드, 오픈넷)
5월	제안 1차 검토	기획분과, 분과 주재 민간위원
	국민제안에 대한 정부기관 검토	행정안전부
	제안 보완 및 참고자료 수집	기획분과
6월	TF 출범 및 4개 분과회의	6.19.(금), 14:00~16:00/서울
	1차 제안 선정	4개 분과
	1차 선정 결과 검토	기획분과
7월	2차 제안 선정	4개 분과
	2차 선정 결과 검토	기획분과
8월	최종 과제 선정	4개 분과
	최종 과제 선정 결과 검토	기획분과
9월	초안 공동작성	4개 분과
	초안 취합 및 보완	기획분과
	초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2주)	기획분과
	OGP 본부 검토 결과 및 대국민 의견 반영	기획분과
	최종 계획 확정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영문 번역	혁신기획과
	OGP 본부에 제출 및 발간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3. 제안 공모 결과 및 목록

□ 열린정부 과제 공모 개요

- (공모 기간) 2020. 3. 23.(월) ~ 4. 22.(수), 한 달간
 - ※ 대국민 안내 및 OGP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3월)
- (공모 주관) 민관협의회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 ※ 행정안전부(정부위원장·간사), 민간위원단(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등) 주관
- (과제 분야) 디지털·개방, 반부패, 재정 투명성, 참여·사회적 가치
- (참여 대상) 정부 부처, 시민사회단체, 국민 누구나
- (참여 방법) (정부) 서식 작성 및 공문 제출, (민간) 온라인* 제출
 - *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OGP Korea」 누리집 www.ogpkorea.org

□ 접수 결과

- 정부 제안(77건), 시민사회·국민 제안(73건), **총 150건 접수 완료**
 - ① 디지털·개방(46건), ② 반부패(26건), ③ 재정투명성(16건), ④ 참여·사회적가치(48건), 기타(14건)
 - ※ 분야는 숙성단계에서 재분류 가능하며 유사 사례는 공동검토 권장
- 기술활용 입법참여 증진(디지털), 국민안전 데이터 개방(개방), 내부고발자 보호(반부패),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재정투명성), 국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참여), 청년·여성참여 확대(사회적가치) 등 제안 접수

□ 추진 현황

- 150개 쏠 제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조회 병행
 - * 빠띠 캠페인즈 주소: <https://campaigns.kr/campaigns/226/pickets>

□ 제안 목록

※ 제안 일부 재분류(6.11.), 세부계획 미제출건은 ~~제안~~ 표시함

연번	제안	제안기관(자)
디지털·개방(46건)		
1	공공데이터 활용한 시빅해킹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	코드
2	국민의 데이터 수요에 상시 대응하는 소통·협력체계 마련	행정안전부
3	전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전자투표 앱 개발	정부혁신 국민포럼
4	대민서비스 사용자 인증시 생체인증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심사 확대	국민 개인
6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시민 교류 채널 확장	국민 개인
7	디지털 국회 활성화 - 빅데이터 활용 국민 여론 분석 및 정책반영	국민 개인
8	스마트폰 중심으로 국민의 입법참여 환경 개선	법제처
9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구축 및 운용	특허청
10	디지털 혁신으로 투명한 유통사회 실현	식품의약품안전처
1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온라인 결제 시스템 구축·운영	광주광역시 서구
12	전북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 구축	전라북도
13	인공지능 도시 조성 - AI 중심 산업혁신 생태계 인프라 조성,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형 창업·혁신 지원	광주광역시
14	납세도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규모 수입업체 법규준수 자율점검	관세청
15	모바일 고지·납부·안내 서비스 확충	국세청
16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KDI
17	데이터 기반 공공 빅데이터 분석 -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민간 빅데이터 구매	제주특별자치도
18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광주광역시 동구

연번	제안	제안기관(자)
19	공공부문 간 데이터 연계·분석	광주광역시 광산구
20	빅데이터와 GIS 기반의 해양사고 원인 분석 및 데이터 공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1	국민과 함께하는 판결문 공개 협의체 운영	오픈넷, 코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2	국민재난안전포털 데이터 개방	코드
23	실용성 있는 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관업무 및 교육 협업	위드위시
24	신산업 촉진, 국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행정안전부
25	해양경찰청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① 국민 관심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 통합 공개 시스템 구축 등	해양경찰청
26	초연결 5G 시대,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강화 관리 체계 확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27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8	회의 정보공개 강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9	정보공개실 효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포털의 광역지사체 단위로 운영	정보화사회실천연합
30	정책 실명제 보완을 통한 정책 민주성 향상	청년워킹그룹
31	식당 성분표시 및 위생 데이터 관리	청년워킹그룹
32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식품영양·기능 성분 데이터 확대	농촌진흥청
33	빠르게 증가하는 해외직구 거래, 먼저 다가가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	청년워킹그룹
34	수산물관계법령위반 사건처리건의 및 사건지휘일자 등 알리비 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35	정부 공지자료의 기계 접근성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만들기	사단법인 임팩트얼라이언스
36	정보공개를 위한 화이트해커 양성	국민 개인

연번	제안	제안기관(자)
37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24 이용 활성화	행정안전부
38	정부-민간 간 정보공유 확대	광주광역시 광산구
39	5G 시대 실감콘텐츠 문화유산 개방	문화재청
40	공공체육시설 데이터화 및 활성화	국민 개인 한동국제법률대학원
41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락(樂) - 공공자원 개방	광주광역시 서구
127	과학철 승강장 온도 배차시간 데이터 활용 냉방시설 확충	청년워킹그룹
128	노인 인구 분포가 높은 지역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횡단보도 크늘막 확대	청년워킹그룹
145	정보공개확대해석 및 법령제정	POS-은행
148	민간의견 수렴을 통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청년워킹그룹
150	데이터경제 시대 기업가정신 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랩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KDI
반부패(26건)		
42	내부고발자 보호	한국투명성기구
43	수익소유권	한국투명성기구
44	반부패 신규 신고제도 도입	국민 개인
45	반부패 청렴 특별대책	광주광역시
46	성과와 출석에 따른 국회의원 연봉 차등 지급 및 자기 홍보 의무화	국민 개인
47	국회의원 청렴 시스템 도입 및 평가	국민 개인
48	시민이 참여한 정부 부처의 소속 감사 활용으로 사각지대 없는 반부패 실천	우체국금융개발원
49	행정조직관리 과정 투명성 제고	포럼 민간위원
50	공공분야 갑질 문화 척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구현	방위사업청
51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광주광역시 동구
52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
53	공기업 채용 관계자 서약서 강화를 통한 채용 투명성 강화	국민 개인

연번	제안	제안기관(자)
54	친인척 채용과정 개입 차단 강화 및 공공부문 채용 투명성 제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55	재취업 심사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56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함께하는 청렴, 공정사회 만들기 - ① 청렴 개념 확립	국민권익위원회
57	② 공공기관 청렴행정·청렴경영 실천 운동	국민권익위원회
58	③ 민간부문으로 청렴문화 확산	국민권익위원회
59	생활 속 불공정 요인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60	의향광주 법률지원단 운영	광주광역시
61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컨설팅	광주광역시 서구
62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화 시스템 구현 - 부패척결을 위한 작은 단위 결정 주체 만들기	국민 개인
63	국가연구개발과제 부패방지 모니터링 및 감사 강화	한국연구재단
64	지자체 투명성과 효율성 고취를 통한 정부신뢰 제고 -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및 부패지수 조사	정의연대
65	악성민원 해결제도 마련을 통한 행정력 제고 - 신고센터 설치, 심의위원회 구성 등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144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국민 개인
147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확립	청년워킹그룹
재정투명성(16건)		
66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도입	기획재정부
67	통합재정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및 재정투명성 제고	기획재정부
68	온라인 재정정보공개법 제정	포럼 민간위원
69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70	선거보조금 투명성 제고	국민 개인 한동국제법률대학원
71	지자체 예산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실태조사	정의연대
72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위한 근로이사제	한국투명성기구

연번	제안	제안기관(자)
73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 지급 방법 개선	한국자치행정학회
74	통상 협상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국민참여 보장	지식연구소 공방
75	공공기관 네트워크 장비 발주 적정성 온라인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6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광주광역시 동구
77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	광주광역시 서구
78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전 과정 주민참여 및 공개	광주광역시 북구
79	주민참여예산제 규모 확대 및 주민참여 상시화	광주광역시 광산구
80	해양경찰청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②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	해양경찰청
118	혁신지향 공공조달	기획재정부
참여·사회적가치(48건)		
81	코로나19 위기대응 공공거버넌스 혁신	KDI
82	정책 컨퍼런스 제안 - 정당,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 마련	국민 개인
83	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제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84	국민 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열린 행정 플랫폼	정보화사회실천연합
85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협의 플랫폼 구축	정부혁신 국민포럼
86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공정거래위원회
87	기업정보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민관협조 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88	시민이 주변 생활 속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안·적용하며 사회문제 해결 - 지역에 특화된 기술개발·적용을 위한 제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9	해양경찰청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③ 시민이 주변 생활 속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안·적용하며 사회문제 해결	해양경찰청

연번	제안	제안기관(자)
90	주민 발안제도 실시 - 작은 결정부터 법 제·개정·폐지 논의를 주민의 투표로 결정	국민 개인
91	지자체 위원회 내 시민위원 구성	경남혁신가네트워크
92	공약사업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	광주광역시 북구
93	누구나 정치참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국민청원제	국민 개인
94	플랫폼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 참여민주주의의 기반 강화	청년워킹그룹
95	“주(住)민에서 주(主)인으로” 사람중심 시민자치 - 주민자치회 강화	광주광역시 서구
96	지역형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리빙랩	제주특별자치도
97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리빙랩 조성·운영	부산광역시
98	사회 전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가족부
99	성주류화 제도 정착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	여성가족부
100	공공부문 여성·장애인 대표성 제고 등 균형인사 확산	인사혁신처
101	국민공감 국민참여 R&SD 선도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	외교정책 관련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국민외교 시스템 활성화	외교부
103	국민과 함께 만드는 법령, 국민참여심사제 운영 내실화	법제처
104	주민체감형 디지털 지역혁신 추진	행정안전부
105	정부광고 시민참여 캠페인	KDI
106	참여형 금융소비자보호 교육과 리더리시 캠페인	KDI
107	시민참여를 통한 ODA 정책의제 공동창조	KDI
108	기후위기 대응 -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전략	UNI 국제사무금융 IT 서비스노조 - 한국협의회
109	생활 쓰레기 데이터화, 시민이 함께 만드는 쓰레기 문제 해결 및 예산 집행	국민 개인 한동국제법률대학원
110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정보화사회실천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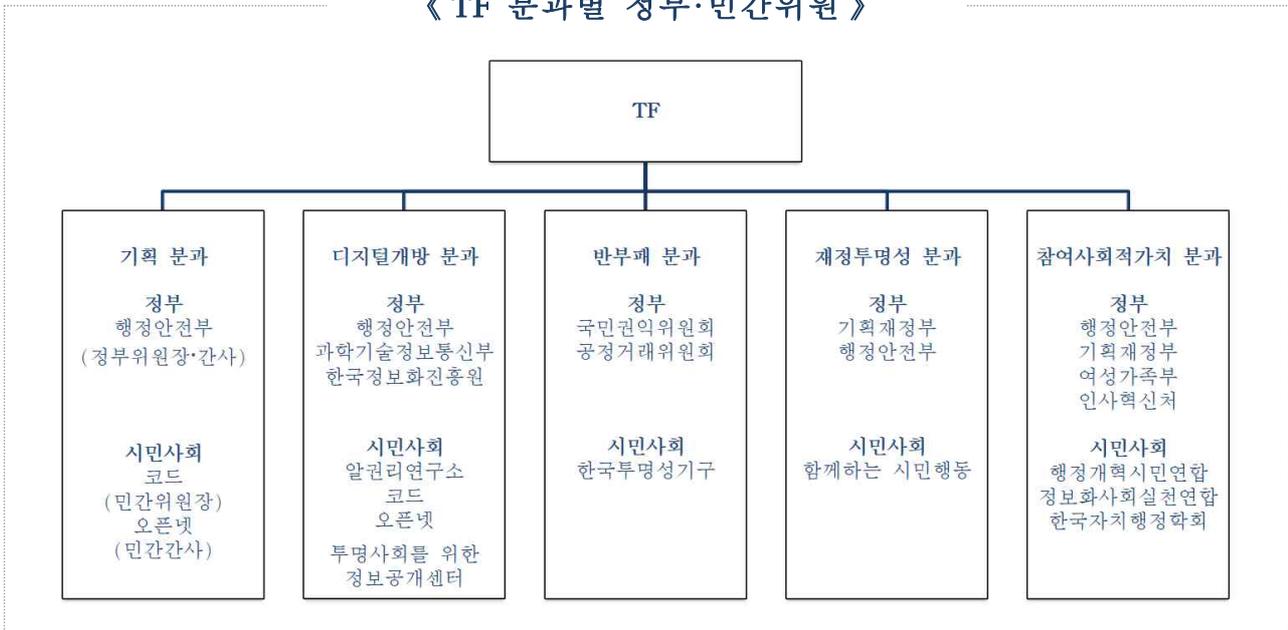
연번	제안	제안기관(자)
111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복지안전망 구축	광주광역시 서구
112	시민인권실천단 '광주인꽃지기' 운영 - 인권증진 캠페인 실시	광주광역시
113	인권이 살아 숨쉬는 일터 만들기(여성 인권)	광주광역시
114	주민 삶의 가치회복을 추구하는 인문도시 조성	광주광역시 동구
115	내 삶을 바꾸는 안전광산 프로젝트 - 시민참여형 '민관 합동 안전망' 구축	광주광역시 광산구
116	임직원의 이해충돌 자가진단체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금융개발원
117	주민이 함께하는 공공갈등관리 체계 확립	제주특별자치도
119	국민과 함께 지켜가는 문화유산, 문화공동체	문화재청
124	찾아가는 방위사업청 - 수출 상담	방위사업청
126	혁신제품의 거래와 소통창구, 혁신장터 운영	조달청
131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3세대 동거가족 우대정책	한.중 중소기업 상무유한공사
136	농지의 실효적 관리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향상	정보화사회실천연합
137	지역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분권형 에너지소비 기반 구축	경상북도
141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청년움부즈만 제도 도입 확대	청년워킹그룹
142	청년세대 나름의 기준을 바탕으로 한 공공영역에 대한 평가와 실천	청년워킹그룹
143	폭 넓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적 미래지향적 접근	청년워킹그룹
146	유치원 및 육아데이터 활용방안	국민 개인
149	포스트 코로나19 열린정부 아카데미 운용	KDI
기타(14건)		
120	정부조직에 대한 교육	국민 개인
121	지속가능한 열린 마을(상생 일자리 창출)	국민 개인
122	국민 생활형 일자리 앱 개발 -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살리기	인천동막초등학교
123	뿌리기술 튼튼, 대한민국 뿌리 튼튼	(주)한국에이엠에프

연번	제안	제안기관(자)
125	소상공인 아카데미 운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129	노인요양원에 화상통화모니터 설치	정부혁신 국민포럼
130	경로당, 마을회관 등 각종 시설 공공요금 재정 절감 방안	국민 개인
132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 - 돌봄서비스	광주광역시
133	영구임대아파트 늘 행복 프로젝트	광주광역시 광산구
134	A형 간염항체 무료검사 및 무료접종	전라북도
135	민방위 스마트 교육 추진	광주광역시 북구
138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인드를 위한 상시학습 혁신	식품의약품안전처
139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해지 절차 간소화	중앙119본부 소속 개인
140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책	한국자치행정학회

4. TF 운영계획

□ 구 성

《 TF 분과별 정부·민간위원 》



○ TF 내 기획분과 및 분야별 4개 분과 구성

- (기획분과)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민간위원장(주재), 정부·민간간사
- (4개 분과) 디지털·개방, 반부패, 재정투명성, 참여·사회적가치를 주관하는 정부기관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 정부-시민사회위원이 각 분과의 간사 역할을 맡고, 제안담당 정부기관·시민사회 단체·개인을 자유롭게 추가

○ 4개 분과는 각 분야 내 지향하는 과제를 검토 및 선정

- (디지털개방분과) 정보공개, 데이터개방, 디지털 활용 열린정부 혁신
- (반부패분과) 부패 방지, 정부의 청렴성·투명성 제고
- (재정투명성분과) 정부의 예산 수립과정, 재정 운영의 투명성
- (참여사회적가치분과) 국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구현

□ 분과 역할

① 분과로 분류된 제안 검토 및 선정

- 검토 기준에 따라 총 3차례 과제 검토 및 선정(3개월간 평균 월1회)
- 타 분과의 제안과 연계 가능한 경우 교차 검토
- 제안 추가발굴 가능

※ 추가 제안과 타 플랫폼에서 발굴한 좋은 제안은 일정상 가능한 선에서 접수하고 온라인 의견(<https://campaigns.kr/campaigns/226/pickets>)도 적극 반영해 검토. 타 분과와 협의를 통해 과제 재분류·공동검토 가능.

< 열린정부 제안 검토 기준 >

■ 열린정부와의 관련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검토(6월)

- 열린정부 가치와의 관련성(개방, 반부패, 시민참여, ICT 활용)
- 계획의 구체성(계획이 목표·방향성 이상을 제시하는지 여부)
- (타 지역·기관에) 확산·적용 가능성
- 정책화 여부
- 제안이 아닌 민원의 성격이 강한 제안 구분

■ 도전적이고, 이행 가능성 있는 과제로 다시 추리기(7월)

- SMART 지표(구체성, 측정 가능성, 이행 가능성, 이행 기간의 적절성)
- 이미 정책으로 실현하는 내용인지에 대한 점검
- 국제동향과의 연계성 검토

■ 주요 분야의 과제를 전략적으로 최종 선정(8월)

- 우수사례(스타 공약) 기본요건*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은 과제
- 이행기관의 참여를 확보한 과제

※ 채택되지 않은 과제는 포럼 내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제사회에 제시할 구체적인 성과가 일부 도출될 수 있는 과제

② 1차 선정된 제안에 대한 민관 의견수렴

- 1차 선정된 제안의 정부 부처를 TF에 추가해 부처협의 진행
- ※ 부처 참여는 행정안전부가 1차 확보하되 ① 제안을 담당하는 부처가 없거나, ② 기관이 참여 의지가 없는 경우, 민간위원이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

③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의 최종 과제 선정

- 이행기관을 확보하고 2년 동안 이행할 수 있는 과제 최종 선정
- ※ OGP가 권장하는 과제 수는 12~15개. 분야별 평균 3~4개 과제가 선정될 예정.
- 최종 선정되지 않은 과제의 경우,
- ※ 「(참고4) OGP 참여와 공동창조 기준」의 상급 요건에 따라 채택된 과제와 채택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사유를 공개

④ 최종 선정된 과제별 초안 작성

- TF 정부·시민사회위원이 함께 초안 작성(서식 제공 예정)
- 작성한 초안은 기획분과에 제출

□ 운영 방법

- 대면 또는 영상회의* 개최(방법·횟수 자율)
 - * 대면회의: 한국정보화진흥원(서울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 별관(세종) 대관 가능, 영상회의: 줌(Zoom) 또는 온나라 영상회의 방 개설 지원 가능
- TF 논의 내용은 각 분과 청년워킹그룹 담당자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획분과에 제출
 - ※ 「(참고4) OGP 참여와 공동창조 기준」의 상급 요건을 준수하여 국가실행계획 제안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

□ TF 정부·민간위원

구 분	담당 기관/부서
기획분과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혁신기획과(정부위원장·간사)
	사단법인 코드(민간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민간간사)
디지털·개방분과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정부정책과 정부간사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데이터정책과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정보공개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과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본부 공공데이터기획팀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본부 디지털정부혁신기획팀
	알권리연구소 민간간사
	사단법인 코드
	사단법인 오픈넷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반부패분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렴정책총괄과 정부간사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민간협력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실
	한국투명성기구 민간간사
재정투명성분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 정부간사
	기획재정부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 재정정보공개과
	기획재정부 국고국 혁신조달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간간사
참여·사회적가치분과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국민참여혁신과 정부간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주민참여협업과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사회적경제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행정개혁시민연합 민간간사
	정보화사회실천연합
한국자치행정학회	

※ TF 구성(안)을 기준으로 과장급(1명), 실무자(1명) 지정 중

5. 1차 검토 결과 (5월, 기획분과+ 검토, 참고자료로 자료)

■ 1차 검토 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S/A/B/로 구분. 과제로 채택할만한 제안 S, 관련성이 적은 제안 B로 표시

- ① 열린정부 가치와의 관련성(개방·반부패·시민참여·ICT 활용)
- ② 계획의 구체성(계획이 목표·방향성 이상을 제시하는지 여부)
- ③ (타 지역·기관에) 확산·적용 가능성
- ④ 정책화 여부
- ⑤ 제안이 아닌 민원의 성격이 강한 제안 구분(B)

※ 통합할 수 있는 유사 제안의 경우 같은 색으로 표시

□ 디지털·개방

연번	제안	제안기관(자)	의견
8	스마트폰 중심으로 국민의 입법참여 환경 개선	법제처	SSSS
21	국민과 함께하는 판결문 공개 협의체 운영	오픈넷, 코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SSSS
1	공공데이터 활용한 시빅해킹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	코드	SSS
3	전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전자투표 앱 개발	정부혁신 국민포럼	SSS
22	국민재난안전포털 데이터 개방	코드	SSS
27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SSS
28	회의 정보공개 강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SSS
35	정부 공지자료의 기계 접근성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만들기	사단법인 임팩트얼라이언스	SSS
40	공공체육시설 데이터화 및 활성화	국민 개인 한동국제법률대학원	SSS/B

연번	제안	제안기관(자)	의견
2	국민의 데이터 수요에 상시 대응하는 소통·협력체계 마련	행정안전부	SS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심사 확대	국민 개인	SS
23	실용성 있는 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관업무 및 교육 협업	위드위시	SS
7	디지털 국회 활성화 - 빅데이터 활용 국민 여론 분석 및 정책반영	국민 개인	SS/B
17	데이터 기반 공공 빅데이터 분석 -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민간 빅데이터 구매	제주특별자치도	SS/B
29	정보공개실 효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포털의 광역지자체 단위로 운영	정보화사회실천연합	S
10	디지털 혁신으로 투명한 유통사회 실현	식품의약품안전처	S
24	신산업 촉진, 국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행정안전부	S
4	대민서비스 사용자 인증시 생체인증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S/B
6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시민 교류 채널 확장	국민 개인	S/B
9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구축 및 운영	특허청	S/B
14	납세도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규모 수입업체 범규준수 자율점검	관세청	S/B
20	빅데이터와 GIS 기반의 해양사고 원인 분석 및 데이터 공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S/B
25	해양경찰청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① 국민 관심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 통합 공개 시스템 구축 등	해양경찰청	S/B
26	초연결 5G 시대,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강화 관리 체계 확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S/B
36	정보공개를 위한 화이트해커 양성	국민 개인	S/B
39	5G 시대 실감콘텐츠 문화유산 개방	문화재청	S/B
41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락(樂) - 공공자원 개방	광주광역시 서구	S/B

연번	제안	제안기관(자)	의견
1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온라인 결제 시스템 구축·운영	광주광역시 서구	S/BB
37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24 이용 활성화	행정안전부	S/BB
30	정책 실명제 보완을 통한 정책 민주성 향상	청년워킹그룹	
32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식품영양·기능 성분 데이터 확대	농촌진흥청	
145	정보공개확대해석 및 법령제정	POS-은행	
148	민간의견 수렴을 통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청년워킹그룹	
150	데이터경제 시대 기업가정신 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랩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KDI	
12	전북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 구축	전라북도	B
15	모바일 고지·납부·안내 서비스 확충	국세청	B
19	공공부문 간 데이터 연계·분석	광주광역시 광산구	B
33	빠르게 증가하는 해외직구 거래, 먼저 다가가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	청년워킹그룹	B
18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광주광역시 동구	BB
38	정부-민간 간 정보공유 확대	광주광역시 광산구	BB
13	인공지능 도시 조성 - AI 중심 산업혁신 생태계 인프라 조성,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형 창업·혁신 지원	광주광역시	BBB
34	수산관계법령위반 사건처리건의 및 사건지휘일자 등 알리비 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BBB

□ 반부패

연번	제안	제안기관(자)	의견
42	내부고발자 보호	한국투명성기구	SS
44	반부패 신규 신고제도 도입	국민 개인	SS
55	재취업 심사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SS
59	생활 속 불공정 요인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SS
64	지자체 투명성과 효율성 고취를 통한 정부신뢰 제고 -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및 부패지수 조사	정의연대	SS
43	수익소유권	한국투명성기구	S
63	국가연구개발과제 부패방지 모니터링 및 감사 강화	한국연구재단	S
45	반부패 청렴 특별대책	광주광역시	S/B
46	성과와 출석에 따른 국회의원 연봉 차등 지급 및 자기 홍보 의무화	국민 개인	S/B
48	시민이 참여한 정부 부처의 소속 감사 활용으로 사각지대 없는 반부패 실천	우체국금융개발원	S/B
56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함께하는 청렴, 공정사회 만들기 - ① 청렴 개념 확립	국민권익위원회	S/B
57	② 공공기관 청렴행정·청렴경영 실천 운동	국민권익위원회	S/BB
58	③ 민간부문으로 청렴문화 확산	국민권익위원회	S/BB
54	친인척 채용과정 개입 차단 강화 및 공공부문 채용 투명성 제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144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국민 개인	
147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확립	청년워킹그룹	
47	국회의원 청렴 시스템 도입 및 평가	국민 개인	B
50	공공분야 갑질 문화 척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구현	방위사업청	B
51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광주광역시 동구	B
60	의향광주 법률지원단 운영	광주광역시	B

연번	제안	제안기관(자)	의견
62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화 시스템 구현 - 부패척결을 위한 작은 단위 결정 주체 만들기	국민 개인	B
65	악성민원 해결제도 마련을 통한 행정력 제고 - 신고센터 설치, 심의위원회 구성 등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B
52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광주광역시 복구	BB
53	공기업 채용 관계자 서약서 강화를 통한 채용 투명성 강화	국민 개인	BB
61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컨설팅	광주광역시 서구	BB

□ 재정투명성

연번	제안	제안기관(자)	의견
67	통합재정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및 재정투명성 제고	기획재정부	SSSS
66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도입	기획재정부	SSS
69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SSS
70	선거보조금 투명성 제고	국민 개인 한동국제법률대학원	SSS
74	통상 협상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국민참여 보장	지식연구소 공방	SSS
78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전 과정 주민참여 및 공개	광주광역시 북구	SS
77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	광주광역시 서구	S
75	공공기관 네트워크 장비 발주 적정성 온라인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B
76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광주광역시 동구	S/B
118	혁신지향 공공조달	기획재정부	S/BB
72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위한 근로이사제	한국투명성기구	
79	주민참여예산제 규모 확대 및 주민참여 상시화	광주광역시 광산구	
73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 지급 방법 개선	한국자치행정학회	B
80	해양경찰청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②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	해양경찰청	BB

□ 참여 · 사회적가치

연번	제안	제안기관(자)	의견
83	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제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SSS
85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협의 플랫폼 구축	정부혁신 국민포럼	SSS
88	시민이 주변 생활 속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안·적용하며 사회문제 해결 - 지역에 특화된 기술개발·적용을 위한 제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S/B
126	혁신제품의 거래와 소통창구, 혁신장터 운영	조달청	SS/B
103	국민과 함께 만드는 법령, 국민참여심사제 운영 내실화	법제처	S
109	생활 쓰레기 데이터화, 시민이 함께 만드는 쓰레기 문제 해결 및 예산 집행	국민 개인 한동국제법률대학원	S
84	국민 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열린 행정 플랫폼	정보화사회실천연합	S/B
87	기업정보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민관협조 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S/B
92	공약사업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	광주광역시 북구	S/B
98	사회 전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가족부	S/B
99	성주류화 제도 정착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	여성가족부	S/B
100	공공부문 여성·장애인 대표성 제고 등 균형인사 확산	인사혁신처	S/B
112	시민인권실천단 '광주인꽃지기' 운영 - 인권증진 캠페인 실시	광주광역시	S/B
82	정책 컨퍼런스 제안 - 정당,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 마련	국민 개인	S/BB
91	지자체 위원회 내 시민위원 구성	경남혁신가네트워크	S/BB
93	누구나 정치참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국민청원제	국민 개인	S/BB
114	주민 삶의 가치회복을 추구하는 인문도시 조성	광주광역시 동구	S/BB
96	지역형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리빙랩	제주특별자치도	S/BB
131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3세대 동거가족 우대정책	한.중 중소기업 상무유한공사	S/BB
104	주민체감형 디지털 지역혁신 추진	행정안전부	

연번	제안	제안기관(자)	의견
141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청년옴부즈만 제도 도입 확대	청년워킹그룹	
142	청년세대 나름의 기준을 바탕으로 한 공공영역에 대한 평가와 실천	청년워킹그룹	
143	폭 넓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적 미래지향적 접근	청년워킹그룹	
146	유치원 및 육아데이터 활용방안	국민 개인	
149	포스트 코로나19 열린정부 아카데미 운용	KDI	
90	주민 발안제도 실시 - 작은 결정부터 법 제·개정·폐지 논의를 주민의 투표로 결정	국민 개인	B
94	플랫폼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 참여민주주의의 기반 강화	청년워킹그룹	B
97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리빙랩 조성·운영	부산광역시	B
102	외교정책 관련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국민외교 시스템 활성화	외교부	B
108	기후위기 대응 -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전략	UNI 국제사무금융 IT 서비스노조 - 한국협의회	B
95	“주(住)민에서 주(主)인으로” 사람중심 시민자치 - 주민자치회 강화	광주광역시 서구	BB
110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정보화사회실천연합	BB
111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복지안전망 구축	광주광역시 서구	BB
113	인권이 살아 숨쉬는 일터 만들기(여성 인권)	광주광역시	BB
116	임직원의 이해충돌 자가진단제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금융개발원	BB
86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공정거래위원회	BBB
89	해양경찰청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③ 시민이 주변 생활 속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안·적용하며 사회문제 해결	해양경찰청	BBB
115	내 삶을 바꾸는 안전광산 프로젝트 - 시민참여형 ‘민관 합동 안전망’ 구축	광주광역시 광산구	BBB
117	주민이 함께하는 공공갈등관리 체계 확립	제주특별자치도	BBB
119	국민과 함께 지켜가는 문화유산, 문화공동체	문화재청	BBB
124	찾아가는 방위사업청 - 수출 상담	방위사업청	BBB

□ 기타

연번	제안	제안기관(자)	의견
122	국민 생활형 일자리 앱 개발 -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살리기	인천동막초등학교	B
120	정부조직에 대한 교육	국민 개인	BB
129	노인요양원에 화상통화모니터 설치	정부혁신 국민포럼	BB
130	경로당, 마을회관 등 각종 시설 공공요금 재정 절감 방안	국민 개인	BB
132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 - 돌봄서비스	광주광역시	BB
133	영구임대아파트 늘 행복 프로젝트	광주광역시 광산구	BB
134	A형 간염항제 무료검사 및 무료접종	전라북도	BB
135	민방위 스마트 교육 추진	광주광역시 북구	BB
136	농지의 실효적 관리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향상	정보화사회실천연합	BB
137	지역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분권형 에너지소비 기반 구축	경상북도	BB
138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인드를 위한 상시학습 혁신	식품의약품안전처	BB
140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책	한국자치행정학회	BB
121	지속가능한 열린 마을(상생 일자리 창출)	국민 개인	BBB
125	소상공인 아카데미 운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BBB
139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해지 절차 간소화	중앙119본부 소속 개인	BBB
123	뿌리기술 튼튼, 대한민국 뿌리 튼튼	(주)한국에이엠에프	BBBB

□ 우수 제안 (1차 접수 제안 중 S를 많이 받은 과제 順)

※ 분야: ① 디지털·개방, ② 반부패, ③ 재정투명성, ④ 참여·사회적가치

연번	연번	제안	제안기관(자)	의견
8	①	스마트폰 중심으로 국민의 입법참여 환경 개선	법제처	SSSS
21	①	국민과 함께하는 판결문 공개 협의체 운영	오픈넷, 코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SSSS
67	③	통합재정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및 재정투명성 제고	기획재정부	SSSS
1	①	공공데이터 활용한 시빅해킹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	코드	SSS
3	①	전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전자투표 앱 개발	정부혁신 국민포럼	SSS
22	①	국민재난안전포털 데이터 개방	코드	SSS
27	①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SSS
28	①	회의 정보공개 강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SSS
35	①	정부 공지자료의 기계 접근성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만들기	사단법인 임팩트얼라이언스	SSS
66	③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도입	기획재정부	SSS
69	③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SSS
70	③	선거보조금 투명성 제고	국민 개인 한동국제법률대학원	SSS
74	③	통상 협상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국민참여 보장	지식연구소 공방	SSS
83	④	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제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SSS
85	④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협의 플랫폼 구축	정부혁신 국민포럼	SSS

□ 미흡 제안 (1차 접수 제안 중 B를 많이 받은 과제 順)

※ 분야: ① 디지털·개방, ② 반부패, ③ 재정투명성, ④ 참여·사회적가치

연번	분야	제안	제안기관(자)	의견
123	⑤	뿌리기술 튼튼, 대한민국 뿌리 튼튼	(주)한국에이엠에프	BBBB
13	①	인공지능 도시 조성 - AI 중심 산업혁신 생태계 인프라 조성,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형 창업·혁신 지원	광주광역시	BBB
34	①	수산관계법령위반 사건처리건의 및 사건지휘일자 등 알리비 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BBB
89	④	해양경찰청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③ 시민이 주변 생활 속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안·적용하며 사회문제 해결	해양경찰청	BBB
115	④	내 삶을 바꾸는 안전광산 프로젝트 - 시민참여형 '민관 합동 안전망' 구축	광주광역시 광산구	BBB
117	④	주민이 함께하는 공공갈등관리 체계 확립	제주특별자치도	BBB
119	⑤	국민과 함께 지켜가는 문화유산, 문화공동체	문화재청	BBB
121	⑤	지속가능한 열린 마을(상생 일자리 창출)	국민 개인	BBB
124	⑤	찾아가는 방위사업청 - 수출 상담	방위사업청	BBB
125	⑤	소상공인 아카데미 운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BBB
139	⑤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해지 절차 간소화	중앙119본부 소속 개인	BBB
18	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광주광역시 동구	BB
38	①	정부-민간 간 정보공유 확대	광주광역시 광산구	BB
52	②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	BB
53	②	공기업 채용 관계자 서약서 강화를 통한 채용 투명성 강화	국민 개인	BB
61	②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컨설팅	광주광역시 서구	BB

연번	분야	제안	제안기관(자)	의견
80	③	해양경찰청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②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	해양경찰청	BB
95	④	“주(住)민에서 주(主)인으로” 사람중심 시민자치 - 주민자치회 강화	광주광역시 서구	BB
110	④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정보화사회실천연합	BB
111	④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복지안전망 구축	광주광역시 서구	BB
113	④	인권이 살아 숨쉬는 일터 만들기(여성 인권)	광주광역시	BB
116	④	임직원의 이해충돌 자가진단체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금융개발원	BB
120	⑤	정부조직에 대한 교육	국민 개인	BB
129	⑤	노인요양원에 화상통화모니터 설치	정부혁신 국민포럼	BB
130	⑤	경로당, 마을회관 등 각종 시설 공공요금 재정 절감 방안	국민 개인	BB
132	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 - 돌봄서비스	광주광역시	BB
133	⑤	영구임대아파트 늘 행복 프로젝트	광주광역시 광산구	BB
134	⑤	A형 간염항제 무료검사 및 무료접종	전라북도	BB
135	⑤	민방위 스마트 교육 추진	광주광역시 북구	BB
136	⑤	농지의 실효적 관리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향상	정보화사회실천연합	BB
137	⑤	지역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분권형 에너지소비 기반 구축	경상북도	BB
138	⑤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인드를 위한 상시학습 혁신	식품의약품안전처	BB
140	⑤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책	한국자치행정학회	BB

6. 국민제안에 대한 부처검토 결과

연번	제목(제안기관/사)	검토 결과
디지털(20건)		
1	공공데이터 활용한 시빅해킹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코드)	<p>「행정안전부 검토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제는 제5차 열린정부국가실행계획에 기제출 ○ 시민이 주도하는 지속적인 시빅해킹 체계 구축·지원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정책에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장려**하는 방안을 기 제출함 <p>* 전국 6개 권역 '오픈스퀘어-D' 운영으로 개발자 네트워킹, 컨설팅, 투자유치 등 지원, 민간주도의 오픈데이터포럼(ODF) 운영으로 정부-민간 간 소통 강화</p> <p>** (정부혁신제안해커톤) 사회적 재난상황과 공공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시빅해커와 공공 온라인해커톤 개최 예정('20.7.)(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 아시아 국가 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주도 사회문제 해결사례를 공유, 시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밖에도 공공데이터 포털 내에 개발자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개발자들 간 정보공유,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음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네트워킹 플랫폼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3	전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전자투표 앱 개발(정부혁신 국민포럼)	<p>「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공직선거법」 상 전자투표 실시 근거 부재 ○ 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을 개발하여 공직선거 외 민간·공공단체 등의 각종 선거에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p> <p>⇨ 시스템(K-voting)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고도화) 할 계획임.</p> </div>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심사 확대(국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토 의견」 해당 제안의 공공기관 정보격차 해소는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있는 사업
6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시민 교류 채널 확장(국민)	(검토 중)
7	디지털 국회 활성화(국민)	(검토 중)

연번	제목(제안기관/사)	검토 결과
	- 빅데이터 활용 국민 여론 분석 및 정책반영	
개방(21건)		
21	<p>국민과 함께하는 판결문 공개 협의체 운영(오픈넷, 코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	<p>「법원행정처 검토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서 공개제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 판결서 인터넷 열람: 누구든지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판결서 및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선거(이하 ‘민사등’이라 함) 판결서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하여 검색, 열람할 수 있음 - 전자우편 예규에 따른 판결서사본 제공: 누구든지 미확정 판결서, 2013. 1. 1. 전에 확정된 형사판결서 및 2015. 1. 1. 전에 확정된 민사등 판결서를 법원 및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판결서사본 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 -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 방문열람: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및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을 검색·열람할 수 있음 ☞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판결서 사본제공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판결서 열람 가능 ○ 판결서 공개 관련 법률개정안 내역(20대 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의원, 의안번호 5780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의원, 의안번호 5782호):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열람 및 복사 허용, 개인정보 보호조치 조항 삭제, 판결서를 검색 및 편집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판결서 열람 및 복사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2017. 8. 29.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 2019. 3. 25.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정, 계속심사 ⇨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관련 논의 진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5. 14. 사법행정자문회의에 판결서 공개 안건이 부의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임 - 사법행정자문회의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있음 - 현재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연구·검토 진행 중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 3. 16.부터 2018. 12. 4.까지 총 12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활동을 종료하였음 ○ 이미 외부위원이 포함된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안건이 논의 중이므로,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되는 경우 논의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연번	제목(제안기관/사)	검토 결과
		<p>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개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미확정 판결서, 2013. 1. 1. 전에 확정된 형사판결서 및 2015. 1. 1. 전에 확정된 민사등 판결서 공개와 관련한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음(현행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위 시점 이후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에 대한 규정) - 법률 개정 전 미확정 판결서 공개와 관련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나, 궁극적으로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또는 판결서 공개와 관련한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 - 사법행정자문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예정 <p>「법무부 검토 의견」</p> <p>해당 안건 관련하여 법무부는 실질적인 관련이 없어 “검토 결과”를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담당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재검토 부탁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서는 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비공개 재판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한 확정 사건의 판결서는 누구든지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하고,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의 위임을 받은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판결서의 열람·복사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법원행정처 소관), 이는 판결서를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서 판결서 관리 방법, 판결서 제공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며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아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부가 소관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는 판결서 열람·복사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과 함께하는 판결문 공개”라는 국민제안은 각급 법원의 판결문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시스템의 구축*,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대법원 규칙의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모두 법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며 법무부가 관여 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는 각급 법원의 판결문을 각급 법원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법무부가 연번 21 “국민과 함께하는 판결문

연번	제목(제안기관/사)	검토 결과
		<p>공개 협의체 운영” 국민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개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단되어 담당기관 관련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p> <p>「국회 검토 의견」 ○ 해당사항 없음</p>
22	국민재난안전포털 데이터 개방(코드)	(검토 중)
23	실용성 있는 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관업무 및 교육 협업(위드위시)	<p>「행정안전부 검토 의견」 ○ 기 시행 중인 사안 ○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개방 중 - 특히 산업적 활용도가 높거나 사회현안과 관련된 중요한 공공데이터는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하여 신규 구축과 개방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책을 심의하는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역할이 중복되는 데이터공개위원회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 또한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정부혁신제안 해커톤’, ‘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음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19년 개최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총 26개이며 2,000개 이상의 팀이 참가, 우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시상 ※ 참고 : 행안부 보도자료,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성공 창업의 지름길’ (‘19.11.25) ** (정부혁신제안 해커톤) ‘사회적 재난 상황과 공공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온라인 해커톤 개최 예정(‘20.7.)(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한 아시아의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시상</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토 의견」 ○ 과제 제안 내용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및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공데이터를 소관하는 행안부 검토 사항임</p>
27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p>「행정안전부 검토 의견」 ○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지방의회 투명성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 필요 - 다만,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정보를 통합적으로</p>

연번	제목(제안기관/사)	검토 결과
		<p>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부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제21대 국회에서 추진예정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협조를 얻어 제안하신 내용과 유사하게 추진 예정
28	회의 정보공개 강화(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p>「국가기록원 검토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작성대상 확대 ⇨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회의록 생산의무 대상(령 제18조 제1항 각 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년(제정) ⇨ '07년(위원(심의)회, 교육감·교육장 추가)⇨ '20년(대학의 장,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장 추가) - 법령상 회의록 작성대상이 방대하여 각급기관별 회의 현황파악조차 어려운 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조사기준 약 2만5천개(중앙·교육청·지자체 대상) ⇒ 당분간 회의 현황 파악 및 생산·관리 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회의록 작성대상 확대는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 회의록 내용상 세부사항들을 추가하여 작성기준 강화 ⇨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의 실질적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기준을 강화하자는 국민제안에 공감함 - 입법취지 역시 국가 주요회의의 의사결정과정 등을 기록화하여 책임행정 구현 및 국민 알권리 충족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음
35	정부 공지자료의 기계 접근성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만들기(임팩트얼라이언스)	(검토 중)
36	정보공개를 위한 화이트해커 양성(국민)	(검토 중)
40	공공체육시설 데이터화 및 활성화(국민)	<p>「문화체육관광부 검토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체육시설은 국민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지원하며, 각 지자체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주체로서 시설 운영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고 있음 ○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 및 인력투입이

연번	제목(제안기관/사)	검토 결과
		<p>수반되어야 하고 모든 지자체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나,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주체(228개 기초자치단체), 다양한 운영형태(지자체 직영, 다양한 민간단체 위탁 등) 등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주 이용대상이 지역 내 주민으로 시설별 프로그램 강좌정보 및 수강신청, 시설예약 등의 수요가 주로 지역주민에 한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통합운영이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이용편의에 기여하는 측면은 높지 않음 ○ 운영의 실효성과 주민편의 제고, 재정 측면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주체인 각 지자체별로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수강신청 및 시설예약서비스 등을 제공·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현 지자체 공공시설의 통합운영 플랫폼인 행안부 공유누리와 연계하여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지자체,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자체(시군구 단위- 시도단위)별 운영→행안부 공유누리와 연계
반부패(24건)		
42	내부고발자 보호(한국투명성기구)	<p>「국민권익위원회 검토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제도 도입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필요성에 공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매년 신고자 및 신고자 지원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신고자 보호정책에 반영 중 - 또한,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공익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비밀보장·책임감면 확대, 부패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계획 추진(권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에는 권익위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상반기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기관 간담회를 개최('20.5.20.)하였고, 하반기 중 정례회의 개최 예정임
43	수익소유권(한국투명성기구)	<p>「금융위원회 검토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등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투명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공감 ○ 다만, 현재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는 법인세법(제119조)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므로,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p>「국세청 검토 의견」 (검토 중)</p> <p>「법무부 검토 의견」</p>

연번	제목(제안기관/사)	검토 결과
44	반부패 신규 신고제도 도입(국민)	<p>(검토 중)</p> <p>「국민권익위원회 검토 의견」</p> <p>○부패행위는 청렴포탈(www.clean.go.kr)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방문, 팩스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고, 1398 또는 110을 통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함</p> <p>○제안된 방안은 부패행위 통제에 대한 효과성에 비해 부서별 전담인력 배치 및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인력·예산 소요 증가, 자율적 업무분위기 저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p> <p>- 또한 일일정황 보고 전담자를 통해 수집되어 기관장까지 보고되는 정보에 대해 정보제공자·신고자 등의 보호가 어려운 점, 진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신규제도의 일괄적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p> <p>○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연수원(사이버교육 포함)을 통한 청렴교육 제공 및 각종 반부패 제도·정책 홍보를 실시하여 반부패·청렴인식을 제고하고 자율적 부패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46	성과와 출석에 따른 국회의원 연봉 차등 지급 및 자기 홍보 의무화(국민)	<p>「국회 검토 의견」</p> <p>○ 국회의원 보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 「국회의원수당법」 ”)」 및 위임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p> <p>- 현행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 최근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아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p> <p>- 이에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 시 수당 등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거나, 현행 국회의원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음</p> <p>○ 제21대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이어져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개정될 경우 본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p>
47	국회의원 청렴 시스템 도입 및 평가(국민)	<p>「국회 검토 의견」</p> <p>○ 국회의원 청렴시스템 도입 및 평가와 관련하여 청렴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나 기준이 결여되어 있어 이행가능성과 실효성이 없어 보임.</p> <p>○ 현행 제도에 따르더라도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년 재산등록의무자로서 재산변동 신고와 신고된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p>

연번	제목(제안기관/사)	검토 결과
		<p>적용 대상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청렴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p> <p>○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제도와 차별성을 두고 국회의원의 청렴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경우라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과 기준이 제시되어야만 하고, 이에 따라 예산 등 국회 전반적인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실행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p>
53	공기업 채용 관계자 서약서 강화를 통한 채용 투명성 강화(국민)	(검토 중)
62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화 시스템 구현(국민) - 부패척결을 위한 작은 단위 결정 주체 만들기	(검토 중)
64	지자체 투명성과 효율성 고취를 통한 정부신뢰 제고(정의연대) -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및 부패지수 조사	(검토 중)
65	악성민원 해결제도 마련을 통한 행정력 제고(남북하나재단,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 신고센터 설치, 심의위원회 구성 등	<p>「국민권익위원회 검토 의견」</p> <p>○ 반복(고질·악성)민원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및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에 적극 공감함</p> <p>- 반복민원 대응 공직자의 피해에 적극적인 대책검토 필요, 반복민원 제기 민원인에 대한 배려도 동시에 필요함</p> <p>- 반복민원의 원인,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고려하여 대책마련이 추진중임</p> <p>○ 반복민원 대응체계 구축·운영 계획 추진(행안부/권익위)</p> <p>- 지자체 발생 민원은 1차 해당 지자체, 2차 광역지자체 전담</p> <p>- 중앙행정기관 발생 반복민원은 1차로 해당되는 기관에서, 2차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담</p> <p>○ 2020년 체계구축 및 제도보완, 2021년 이후 본격 운영계획</p>
재정투명성(12건)		
69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검토 중)
70	선거보조금 투명성 제고(국민)	<p>「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 의견」</p> <p>○ 선거보조금 및 선거보전비용 공개 관련 정책 연계는 국민들이 선거참여 활동과 비용지출을 함께 만드는 활동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해되며,</p> <p>○ 선거보조금 투명성 제고 등에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선거보조금 지출절차에 국민들이</p>

연번	제목(제안기관/사)	검토 결과
		<p>참여하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p> <p>○ 해당 제안이 선거보조금 지출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정당이 수용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취지라면 정당 활동의 자유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다른 나라에서 유사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과 제안내용의 구체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정책의 연계성 및 이행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p> <p>○ 참고로, 국민들이 선거보조금 지출의 방향이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당에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하고 정당이 자율적으로 선거보조금 지출에 참고하는 것을 현행법상 제한하는 규정 없음.</p> <p>※ 「정치자금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에 따라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열람 및 사본교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열람대상 서류 중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p> <p>※ 참고로 https://www.nec.go.kr/portal/bbs/list/B0000342.do?menuNo=200035 검색란에 "보조금" 검색하시면 최신 지급 내역을 볼 수 있으며 선거비용 관련 사용 내역은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에(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00415&topMenuId=CE&secondMenuId=CELA02)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시기 바랍니다.</p> <p>「국회 검토 의견」 ○ 해당사항 없음</p>
74	통상 협상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국민참여 보장(지식연구소 공방)	<p>「산업통상자원부 검토 의견」</p> <p>○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FTA 협상 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 대응방향을 마련하고, 상대국가와의 협상 내용도 간담회, 설명회,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p> <p>*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p> <p>- (공청회) 통상절차법 제7조 따라 협상개시 전 공청회를 개최하여 FTA 추진경과·필요성 등을 안내하고,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있습니다.</p> <p>- (관계부처 협의) 공산품·농수산물·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정부 내 관계부처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협상전략을 조율하고 이해관계자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p> <p>- (국내설명회 개최) 정부 통상정책 공유·확산, FTA</p>

연번	제목(제안기관/사)	검토 결과
		<p>활용 등을 통한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하여 지역 중견·중소기업 대상 국내설명회를 개최('19년 6회 개최)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활용지원) FTA종합지원센터 및 'FTA강국,KOREA'홈페이지(www.fta.go.kr) '참여마당' 온라인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여 기업이 겪고 있는 FTA 활용 관련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 FTA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법」* 상 근거와 절차에 따라공개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FTA강국,KOREA'홈페이지 (www.fta.go.kr)를 통해 협정문, 협상 일지, 언론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8조 규정에 근거 우리부에서 생산된 FTA 관련 정보목록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의 FTA 협상 전략과 관련된 문서는 일부 비공개하고 있음(「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통상절차법」 제4조 제2항 제2호 해당)
참여(27건)		
82	<p>정책 컨퍼런스 제안(국민) - 정당,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 마련</p>	<p>「국회 검토 의견」 ○ 해당사항 없음</p>
83	<p>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제안(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	(검토 중)
84	<p>국민 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열린 행정 플랫폼(정보화사회실천연합)</p>	(검토 중)
85	<p>국민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협의 플랫폼 구축(정부혁신 국민포럼)</p>	(검토 중)
90	<p>주민 발안제도 실시(국민) - 작은 결정부터 법 제·개정·폐지 논의를 주민의 투표로 결정</p>	(검토 중)
91	<p>지자체 위원회 내 시민위원 구성(경남혁신가네트워크)</p>	(검토 중)
93	<p>누구나 정치참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국민) - 노인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국민청원제</p>	(검토 중)
94	<p>정부혁신 국민포럼 활동을 지방으로 확산(청년위킹그룹)</p>	(검토 중)

연번	제목(제안기관/사)	검토 결과
사회적가치(10건)		
108	기후위기 대응(UNI 국제사무금융 IT 서비스노조) -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전략	<p>「환경부 검토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제안한 관련부처, 전문가 협의체 구성, 청년그룹 대상 공모전, 앱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은 기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사항으로 선정과제로 부적합 ○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총괄부처로서 중장기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20.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운영(19.3월~12월, 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 청년 등 7개분과, 69명 참여) ○ 청년들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지원을 위해 '19년부터 대학생 환경동아리를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19년 50개, '20년 40여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20년은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그린캠퍼스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음(4월~10월) * (공모주제) 탄소중립캠퍼스 조성방안 및 기후변화 인식 확산 방안 ○ 아울러, 국민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도록 하는 콘텐츠를 탑재한 모바일앱을 개발중에 있으며, '20년 말에 개시 예정임
109	생활 쓰레기 데이터화, 시민이 함께 만드는 쓰레기 문제 해결 및 예산 집행(국민)	<p>「환경부 검토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세대 주택에 적합한 분리수거 박스 제공은 관할 지자체 소관사항*이며, 생활폐기물 배출량 데이터화, 예산 집행 공개 등은 기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사항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은 지자체장 ○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에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거점 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확대 추진중('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은 지자체장에 있으나,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국가의 예산 범위에서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 가능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 (총 사업비 50% 국고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시설내용) 구조물, 분리수거함, 전기시설(CCTV 등) 등 · (설치기준) △ 분리 배출이 취약한 단독주택, 농어촌 등을 대상으로 △ 이용 세대수,

연번	제목(제안기관/사)	검토 결과
		<p>쓰레기(재활용품) 발생량, 가구 밀집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장소) 지역 주민의견을 고려한 장소, 부득이하게 사유지를 선정할 경우는 토지주와 사전협의(동의서 제출 등) ○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역별 1인당 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및 집행 현황 등은 구축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나아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지속 정비할 예정 ○ 자원순환·폐기물 관리의 국민적 관심과 의식 변화를 위해 정부·지자체·기업·시민사회 등 모두 참여하는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을 구축하여 범국민운동 전개할 예정('20년중)
110	<p>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정보화사회실천연합)</p>	<p>「환경부 검토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난개발 방지, 환경영향평가 공정성 확보, 통합환경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제안내용 관련 사항들이 기 시행 또는 추진 중에 있어 별도 과제로의 선정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지역 환경 정책의 실효성 확보 제도 마련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환경지표는 환경부 국가승인통계 및 행정기초통계 중 환경정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내용 중 일부를 e-나라지표로 선정, e-나라지표 시스템* 및 환경통계포털에 서비스 중(총 29개) *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범정부 국정통계시스템" - 소규모 개발 난개발의 실효적 방지를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 도입·시행('18.11)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및 관련 연구용역* 추진중 * 환경오염취약지역 내 소규모 공장 환경성 검토 강화 방안 연구('20.3~10) -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거짓·부실 평가서 관리기반 및 평가서 검토 체계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기 추진* * 거짓 평가서에 대한 재평가 시 제3의 기관(KEI 등)에서 대행업체 선정 등 대행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 위탁·수행('18.11), 검토기관을 기존 KEI에서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으로 확대('20.5) 등 ○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통합환경정보관리 체계 구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의 정보 제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능형 서비스* 구축·시행('20.3~) * 단순한 원문 조회에 한정된 서비스 대비 누적 구축된 평가서 및 공간 자료 기반의 분석을 통해

연번	제목(제안기관/사)	검토 결과																				
		환경영향 인자의 사전 제공, 시간적·공간적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지능형 서비스 제공 - 대기, 수질 환경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연계 수집하여 통합관리하고, 분석·활용할 수 있는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1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중																				
기타(23건)																						
120	정부조직에 대한 교육(국민)	<p>「행정안전부 검토 의견」</p> <p>○ 부처 의견 : 기 시행</p> <p>- (검토결과)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국민이 참여하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 제안해주신 '정부조직 교육'은 현재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나라배움터)*에서 '정부조직관리'라는 제목으로 공무원·일반국민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 중임 * 공동활용기관(전라북도, 경상대, 조달청)의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교육 수강 가능</p> <p>- 앞으로도 국민들의 정부조직에 대한 관심 및 국민참여 증대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반국민에 대한 교육과정을 확대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 교육과정('정부조직관리') 개요</p> <p>- 교육기간 : '20.1.~12.</p> <p>- 차시구성</p> <table border="1" data-bbox="641 1167 1374 1480"> <thead> <tr> <th>차시</th> <th>제 목</th> <th>차시</th> <th>제 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정부조직의 개념과 근거</td> <td>5</td> <td>정부조직관리의 목표와 절차</td> </tr> <tr> <td>2</td> <td>정부조직체계1-중앙행정기관과 하부조직</td> <td>6</td> <td>정부조직관리의 기준</td> </tr> <tr> <td>3</td> <td>정부조직체계2-소속기관등</td> <td>7</td> <td>정부조직관리제도1-책임운영기관제도</td> </tr> <tr> <td>4</td> <td>정부조직의 변천</td> <td>8</td> <td>정부조직관리제도2-위원회관리 등</td> </tr> </tbody> </table>	차시	제 목	차시	제 목	1	정부조직의 개념과 근거	5	정부조직관리의 목표와 절차	2	정부조직체계1-중앙행정기관과 하부조직	6	정부조직관리의 기준	3	정부조직체계2-소속기관등	7	정부조직관리제도1-책임운영기관제도	4	정부조직의 변천	8	정부조직관리제도2-위원회관리 등
차시	제 목	차시	제 목																			
1	정부조직의 개념과 근거	5	정부조직관리의 목표와 절차																			
2	정부조직체계1-중앙행정기관과 하부조직	6	정부조직관리의 기준																			
3	정부조직체계2-소속기관등	7	정부조직관리제도1-책임운영기관제도																			
4	정부조직의 변천	8	정부조직관리제도2-위원회관리 등																			
121	지속가능한 열린 마을 - 상생 일자리 창출(국민)	<p>「행정안전부 검토 의견」</p> <p>□ 수용 의견 : 기시행</p> <p>○ (검토결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중 - 마을의 청년, 중년 노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중 - 친환경 핸드메이드 제작 및 제품판매 사업으로 마을기업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정 가능 ※붙임: 마을기업 육성사업(선정기준 및 지정절차)</p> <p>□ 마을기업 육성사업 개요</p> <p>○ (목적)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소득 및 일자리</p>																				

연번	제목(제안기관/사)	검토 결과
		<p>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①최대 3년간 1억원(1차:50백만원→2차:30백만원→3차:20백만원) 사업비 지원, ②재무·마케팅 교육지원, ③컨설팅, 판로, 홍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지역주민(읍면동 기준) 5인 이상 출자한 법인
122	<p>국민 생활형 일자리 앱 개발(인천동막초등학교) -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살리기</p>	<p>「고용노동부 검토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안정법령에서는 공공행정기관인 직업안정기관 이외에 민간의 유·무료 직업소개소를 통한 직업소개를 허용하고 있음 ○ 생활형 일자리에 대한 매칭은 민간영역에서 개발한 다양한 앱(‘숨은고수’, ‘대리주부’ 등)을 통해서 매칭 중임 ○ 민간에서의 자율적인 사업운영과는 달리 자치단체 등 공공영역에서 주관하는 앱을 만드는 것은 앱의 효과성과 타당성*, 피해 예방대책, 구인·구직의 대상 범위**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 공공영역이 민간 자율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큼 ** 현행 직업안정법령상의 구인 구직의 알선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반면, 생활형 일자리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시적인 업무의 위탁(용역 등) 수행으로 판단됨 ○ 이에, 공공영역에서 신규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123	<p>뿌리기술 튼튼, 대한민국 뿌리 튼튼(한국에이엠에프)</p>	<p>「산업통상자원부 검토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 개선 및 유해물질 노출 최소화 관련 다양한 사업 기시행 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공정) 6대 업종별 공정설비에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단위공정에 특화된 뿌리공정 시스템 지속 구축(산업부) - (스마트 공장) 뿌리기업 맞춤형 공통요소기술과 IoT, ICT 도입 및 사후관리/성과정량화 등 스마트공장 구축 패키지 지원(중기부) - (지능형 로봇) 뿌리기업 로봇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에 용접 등 뿌리기업 지원강화(산업부) - (자동화·첨단화) 뿌리기업의 수작업, 재해유발-위험 공정 등 작업환경 개선, 공정혁신을 위한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중기부) ○ 뿌리기술 관련 전문 커리큘럼 기개발 및 운영 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리큘럼) 업종별 뿌리기업의 현장 적용력 향상 및 필요 직무교육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구축 인력양성계획 개발 및 운영 中 *표면처리, 금형(‘19년) → 용접(‘20년)으로 확대 ○ 청년층 비중 확대를 위하여 고용부와 협의하여

연번	제목(제안기관/사)	검토 결과
		<p>금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뿌리전용으로 기지원 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 2020년 청년공제 사업 중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 신청 가능
129	노인요양원에 화상통화모니터 설치(정부혁신 국민포럼)	<p>「보건복지부 검토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제안은 수용 곤란 ○ 노인요양시설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 관리운영비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을 통해 이미 지급하고 있음 - 시설에서 화상통화에 필요한 모니터 및 공용 휴대전화 등은 관리운영비로 자체 구입하는 것이 적절 ※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p>▶(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p> <p>▶(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p> <p>▶(급여내용) 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단기보호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섬·벽지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p> <p>▶(급여이용절차)</p> <p>(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공단직원) 방문조사 → (등급 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p> <p>▶(재원조달방식)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의 10.25%), 국가지원(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약 20%), 본인부담금(시설 20%, 재가 15%)</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p> <p>▶(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p> </div>

연번	제목(제안기관/사)	검토 결과
		<p>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p> <p>▶(급여내용) 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단기보호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섬·벽지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p> <p>▶(급여이용절차)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공단직원) 방문조사 → (등급 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p> <p>▶(재원조달방식)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의 10.25%), 국가지원(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약 20%), 본인부담금(시설 20%, 재가 15%)</p>
130	<p>경로당, 마을회관 등 각종 시설 공공요금 재정 절감 방안(국민)</p>	<p>「보건복지부 검토 의견」</p> <p>○ 동 제안은 기 시행중임</p> <p>○(현황) 경로당 운영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이므로,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p> <p>- 다만, 지방재정부담 경감과 노인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음</p> <p>* '19년말 67,024개소</p> <p>** '20년 예산 342억원(국비보조율 서울 10%·그외지방 25%)</p> <p>○(관리) 냉·난방비는 각 지자체에서 지역 경로당 여건(규모, 이용자수 등)을 고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집행·정산 등 관리하고 있음</p> <p>- 경로당 냉·난방비는 실비 지원이므로, 경로당에서 공공요금 고지서에 따라 실제로 납부하고 회계연도 종료후 남은 잔액은 지자체에 반납하는 등 정산하고 있음</p> <p>- 아울러, 「노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을 통해 '경로당 이용시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냉·난방비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p>
131	<p>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3세대 동거가족 우대정책(한.중 중소기업 상무유한공사)</p>	<p>(검토 중)</p>
136	<p>농지의 실효적 관리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향상(정보화사회실천연합)</p>	<p>「농림축산식품부 검토 의견」</p> <p>□ 농경지에 대한 전자지도 구축</p> <p>○ 우리 부는 전국 농지(농지원부 기준 147만ha)에 대한 공간정보(전자지도)를 자체 운영 중인</p>

연번	제목(제안기관/사)	검토 결과
		<p>‘농지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축하여 이미 운영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축된 전자지도를 통해 소유면적, 진흥지역여부 등 농지정보를 관리하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연계하여 연속지적도, 행정구역도, 토지대장 등을 제공 받아 농지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있음 - 또한, 농지공간포털*(http://njl.mafra.go.kr)을 통해 농지관련 지도서비스(전자지도)와 각종 농지관련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p>* 농지공간포털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농지행정정보(농지원부, 농지조서 등)와 항공영상, 연속지적도 등 국가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간(GIS)정보 기반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p> <p>□ 농경지 전자지도를 활용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원부 정비, 농지불법전용조사를 위해 농지정보시스템에 기 구축된 농경지 전자지도,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고 있음 - 향후 농지 공간정보(전자도면)에 대한 최신정보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도, 경지정리현황도 등을 매년 갱신하여 대국민 제공과 함께 농지관리와 농지정책에 적극 활용할 예정임
139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해지 절차 간소화(중앙119본부 소속 개인)	(검토 중)
141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청년옴부즈만 제도 도입 확대	(검토 중)
142	청년세대 나쁨의 기준을 바탕으로 한 공공영역에 대한 평가와 실천	(검토 중)
143	폭 넓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적 미래지향적 접근	(검토 중)
144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p>「법무부 검토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 성폭력 등 범죄 피해 사실 등 적시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인터넷이나 SNS 발달 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확산되는 추세임 -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이익형량으로 위법성을 조각하여 표현의 자유 보호하는 현행 체계 유지 필요 ○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 의견도 충분히 고려 필요가 있음 - 20대 국회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연번	제목(제안기관/사)	검토 결과
		<p>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명예훼손죄 처벌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음</p> <p>※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2015헌바234)</p>
145	정보공개대해석 및 법령제정	<p>「기획재정부 검토 의견」</p> <p>○ 기획재정부</p> <p>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시스템)의 경우, 2017년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p> <p>- 국고보조사업 연간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보조사업의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등의 정보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운영하고 있음</p> <p>○ 참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은 행안부(정보공개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e-나라도움)내 예산의 정보공개와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p> <p>「농림축산식품부 검토 의견」</p> <p>○ 지역농협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법령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임</p> <p>-다만, 판례(대구고법 2008누212)는 지역농협(조합)이 정보공개법 상 정보공개 대상이되는 특수법인으로 보지않은 바 있으며,</p> <p>○ 행정심판(사건 08-17709)에서는 중앙회를 정보공개 대상인 특수법인으로 판단한 바 있음</p> <p>「행정안전부 검토 의견」 (검토 중)</p>
146	유치원 및 육아데이터 활용방안	(검토 중)
147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확립	(검토 중)
148	민간의견 수렴을 통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검토 중)
149	포스트 코로나 19 열린정부 아카데미 운용	(검토 중)

□ OGP 개요

-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10.9월 UN 총회 연설 계기, 각국정부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 '11년 출범한 다자간 협력사업
-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투명성 증진,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등 열린정부 구현이 주 목적

※ 시민사회를 정책결정에 있어 정부와 동등한 주체로서 인식하는 차원에서, 기존 국제기구와는 달리 국가 간 다자조약에 기반하지 않는 "파트너십"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

< OGP 추진경과 >

- '11. 9. 20. 유엔총회 계기 OGP 공식 출범식 개최
- '13. 10월(영국), '15.10월(멕시코), '16.12월(프랑스), '19.5월(캐나다) 글로벌서밋 개최
- '20. 2월 기준, 미국, 영국, 프랑스, 남아공 등 78개국 가입

□ 운영위원회

OGP 운영위원회 정부위원단('20.2월 기준)			
아시아-태평양(3)	미주(2)	유럽(4)	아프리카(2)
우리나라(부의장국)	아르헨티나(의장국)	프랑스(재선)	남아공
조지아	캐나다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루마니아(재선)	
		독일	

※ 매년 10월 신규의장단 1년 임기 시작, 차년도 부의장국 → 의장국 승격

- OGP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OGP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11개국 정부기관 및 11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 운영위원국은 OGP 가입국의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재선 가능

- OGP 운영위원회는 OGP의 활동 방향과 의제 설정, OGP에 대한 재정 관리 총괄, 의장국 선출 등 수행

□ 의장단

- (구 성) 정부의장, 시민사회의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의장(lead chair), 부의장(support chair)로 구성(총4인)
 - ※ 의장단(2020.1월 기준): 아르헨티나(정부의장), 우리나라(정부부의장), The B-Team 소속 로빈 호데스(시민사회의장), Directorio Legislativo 소속 마리아 바론(시민사회부의장)
- (임 기) 의장 1년, 부의장 1년, 총 2년
- (주요 역할) OGP 내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균형 도모, OGP를 대외적으로 대표, 가입국 확대, 글로벌서밋 개최 등

구분	역할
고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 성격인 ‘OGP 글로벌서밋’ 개최(정상급) ■ 운영위원회 장관회의 주재(연1회, 장관)
실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실무회의 주재(연3회, 국장급) ■ 거버넌스리더십소위원회(의장단) 월례회의 주재(국장급) ■ 안건별 검토 및 입장 표명 예) OGP 탈퇴희망국, 비활성국 발생 등 ■ 전략 수립 자문 예) OGP 3년 이행계획, 지방정부전략 등 ■ 외교채널을 활용한 고위급 인사 참석 확보 예) UN총회, 의장단 인수인계 행사, OGP 글로벌서밋 등 ■ OGP 회원국의 재정의무 준수 독려 ■ OGP의 국제적 확산, 가입 권유, 비활성국 지원 등

□ 개 요

- 우리정부(주무부처: 행정안전부)는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협약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2011년 출범 당시 가입하여 활동 중
- OGP가 제시하는 권고사항에 따라 ① 열린 정부 실행계획 수립·이행·점검, ② 국내 민관협약체 운영 중이며, 회원국의 재정 의무* 준수

* 세계은행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연 20만 달러 기여

□ 우리부 활동 현황

- (의장국 선출) OGP를 대표하는 의장국으로 선출 **국제**
 - 시민사회의장 마리아 바론(Maria Baron)과 파트너로 활동
 - '19.10월~'20.9월 부의장국, '20.10월~'21.9월 의장국 역할 수행
- ※ 역대 의장국(정부의장): 제1대 미국, 제2대 브라질, 제3대 영국, 제4대 인도네시아, 제5대 멕시코, 제6대 남아프리카공화국, 제7대 프랑스, 제8대 조지아, 제9대 캐나다, 제10대 아르헨티나, 제11대 대한민국
- (운영위원회 활동) OGP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진출('17.3.월), '17.10월부터 3년 임기 수행(1회 재선 가능) **국제**
 - 장관회의(1회), 실무회의(3회)를 연례 대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
- (제4차 국가실행계획 이행) 정부와 시민사회가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실행계획 수립(이행 기간: 2018. 9.~2020. 8.) **국내**
 - 우리부 포함 7개 기관에서 참여하는 13개 열린정부 공약* 이행
- * 공약 이행기관(개수): 국민권익위원회(1개), 문화체육관광부(2개), 행정안전부(5개), 식품의약품안전처(2개), 외교부(1개), 문화재청(1개), 관세청(1개)
- (민관협약체 운영) 국내 열린정부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시민사회 간 정례협약체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운영 **국내**

1. **포부(ambitious)** :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시민 참여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현 상태 (status quo)를 크게(significantly) 개선하여, 정부의 현재 관행을 넘어서는 열린 정부 개혁을 촉진한다. 정부는 국가실행계획을 통해 열린 정부 관련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채택할 수도 있고, 기존의 개혁을 지속할 수도 있다.
2. **가치 관련성(Relevant)** : 각 공약은 아래 가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명확하게 부합하여야 한다.
 - ▶ **투명성** : 정부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 ▶ **책임성** : 정부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정부규칙, 규제, 메커니즘 등
 - ▶ **참여** :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통해 혁신적, 효과적인 거버넌스에 기여
 - ▶ **기술 및 혁신** : 기술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및 활용능력 향상, 혁신을 이끌어가는 신기술의 역할 등
3. **스마트(SMART)** :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고, 질문에 대응할 수 있고, 가치 관련성이 있고, 이행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 ▶ **Specific** :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 문제, 예상되는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
 - ▶ **Measurable** : 공약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다수의 하위 공약이 있는 경우, 명확하고 측정가능한 이행지표로 분리 가능
 - ▶ **Answerable** : 공약 이행 주무 기관, 조정 또는 지원 기관, 필요 시 관련 시민사회 또는 민간부분 파트너들을 명시
 - ▶ **Relevant** : 공약은 상기 열린정부 가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과 관련
 - ▶ **Time-bound** : 계획 완수일자, 단계별 마감 시한 등을 명시
4. **구성과 기간**
 - ▶ 여러 주제 영역에 걸친 5~15개의 좋은 공약이 존재감 없는 다수의 공약을 제출하는 것 보다 낫다.
 - ▶ 분명하고 간결하며 실천 지향적어야 하고, 기술적 용어와 같은 어려운 용어는 최소화하고 평이한 언어로 작성해야 한다.
 - ▶ 다수 부처와의 협력을 장려한다.
 - ▶ 모든 국가실행계획은 6월 30일로 종료되는 2년의 이행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각 공약마다 적어도 1년 단위의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한다. 차기 국가실행계획으로의 이월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 이행 완수에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공약도 제출할 수 있다.

구 분		기준 내용
정보의 확산	기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또는 다수이해관계자포럼은 국가 OGP 사이트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기타 소통수단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국가실행계획 수립과정을 공유한다. ▶ 국가실행계획 수립 과정에는 주요 단계 및 기한 일정표, 참여기회(예: 회의, 행사, 서면협의, 평가 체계), 그리고 과제사항에 대한 합의 및 국가실행계획 최종확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등이 포함된다. ▶ 정부는 국가 OGP 사이트를 통해 정기적으로(월1회 이상) 행사 보고서, 초안, 기타 관련 정보 등 국가실행계획의 개발과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개한다. ▶ 정부는 국민·시민사회의 기여 부분의 전반적인 개요와 정부의 답변을 국가 OGP 사이트에 공개한다.
	상급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또는 다수이해관계자포럼은 시민,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신문·TV·라디오·이메일·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적절히 사용하여 국가실행계획 수립 과정 및 참여 기회에 대해 홍보한다. ▶ 정부 또는 다수이해관계자포럼은 국가실행계획 수립 중 나눈 모든 협의 내용을 국가 OGP 사이트에 공개한다. ▶ 다수이해관계자포럼은 국가 OGP 사이트를 통해 국가실행계획 채택된 과제에 대한 이유와 채택되지 않은 과제안에 대한 사유를 공개한다.
대화와 공동창조를 위한 공간과 플랫폼	기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다수이해관계자포럼의 지도에 따라 관심이 있는 시민,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부문 등 이해관계자에게 국가실행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정부는 참여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배경지식(열린정부, OGP, 국가실행계획 범위, 수립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한다. 이는 국가 OGP 사이트 및 회의·행사에서 제공된다. ▶ 정부 또는 다수이해관계자포럼은 적절한 협의방법을 개발한다. 협의 방법에는 공개회의와 온라인 참여의 적절한 조합이 있어야 하며 국가 전역에 걸친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해야하고, 적절한 기간 동안 진행되어야 한다. ▶ 정부는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한다. 정보는 국가 OGP 사이트 및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공개되고 전파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서면 답변, 온라인 토론, 설문조사, 대면회의 또는 원격회의 등)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기간 동안(예: 2주 이상) 진행되어야 한다.

<p>대화와 공동창조를 위한 공간과 플랫폼</p>	<p>상급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이해관계자포럼은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국가실행계획의 안전을 상정한다. 안전 상정 과정에 중요 주제 선정, 해결해야 할 문제 파악 및/또는 과제 제안 등이 있을 수 있다. ▶ 다수이해관계자포럼은 국가실행계획 수립에 있어 홍보 행사 및 온라인 토론 등 개최 시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 다수이해관계자포럼은 정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과제안의 작성에 대해 논의하고 조율하는 작업반의 형성을 감독한다. ▶ 다수이해관계자포럼은 국가실행계획 작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한다. 이는 충분히 홍보되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피드백 방법(예: 서면답변, 온라인토론, 설문조사, 대면회의 또는 원격회의 등)을 제공해야 하며, 적절한 기간 동안 진행되어야 한다.
<p>공동주인의식 및 공동의사결정</p>	<p>기본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이해관계자포럼은 자주 모임을 가지고(월 1회 이상) 국가실행계획 수립과정(예: 회의 수, 장소,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며 감독한다. ▶ (과제 개발 시) 정부위원은 과제에 대한 정부·시민사회 우선순위 및 제안된 과제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해 다수이해관계자포럼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한다. ▶ (계획 초안이 작성되고 나면) 정부위원은 이에 대한 논평 및 국가실행계획에 최종 반영될 과제에 대해 다수이해관계자포럼과 함께 논의하고, 그 결정에 도달한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한다.
	<p>상급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이해관계자포럼은 국가실행계획 수립 과정(행사 수, 장소, 형식 등)에 대하여 함께 설계하고 합의한다. 다만, 프로세스의 질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 제안은 다수이해관계자포럼을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된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국가실행계획에 채택될 과제에 대해 동등한 거부권을 지닌다. ▶ 정부 및 시민사회는 다수이해관계자포럼을 통해 국가실행계획에 채택될 과제에 대해 함께 합의한다.

참고 5

제1-4차 국가실행계획 과제 목록 (총 40개)

□ 제1차 국가실행계획 (8개 공약)

연번	과제명	주관부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열린 정부		
1	정부-국민 간 소통창구 마련	행정안전부
2	범정부 정부-시민 소통 채널 개선	행정안전부
3	온라인 정부 포털의 접근성 강화	행정안전부
4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공공 청렴성 증진을 위한 열린 정부		
5	정보공개 강화	행정안전부
6	부패 없는 사회	국민권익위원회
보다 효율적인 공공자원 관리		
7	데이터개방 포털 활성화	행정안전부
8	국민의 정부 감시 강화	행정안전부

□ 제2차 국가실행계획 (5개 공약)

연번	과제명	주관부처
공공서비스 개선		
1	민관협치 강화	안전행정부
2	수요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안전행정부
공공청렴도 향상		
3	정보공개 고도화	안전행정부
4	공직자 윤리 강화	안전행정부
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		
5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	안전행정부

□ 제3차 국가실행계획 (14개 공약)

연번	과제명	주관부처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1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행정자치부
2	국민체감형 원문정보 지속적 발굴·제공	행정자치부
3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이용 활성화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개방		
4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행정자치부
5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행정자치부
6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	행정자치부
7	개방표준 제·개정 및 적용 확산	행정자치부
시민참여		
8	국민 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행정자치부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9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행정자치부
10	대국민 서비스포털 통합	행정자치부
11	대국민 서비스 알리미 앱 개발·제공	행정자치부
반부패 및 공직윤리		
12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재정투명성 제고		
13	국제원조 정보 공개	국무조정실
14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국무조정실

□ 제4차 국가실행계획 (2018.9-2020.8, 13개 공약)

연번	과제명	주관부처
1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국민권익위원회
2	공연장 기술정보 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 제안	문화체육관광부
3	정책실명제 강화	행정안전부
4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5-1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대국민 소통 및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외교 시스템 구축	외교부
5-2	온·오프라인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운영	행정안전부
6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국민포럼 운영	행정안전부
7	국민 다소비·다빈도 식품별 유해물질(19종) 함유량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8	문화관광분야의 미래산업을 위한 데이터 개방	문화체육관광부
9	문화유산자원 공개로 국민의 신산업 육성 지원	문화재청
10	민간 활용도 높은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행정안전부
11	민간의견 수렴을 통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행정안전부
12	자발적 법규준수 기반의 관세행정 체제로의 전환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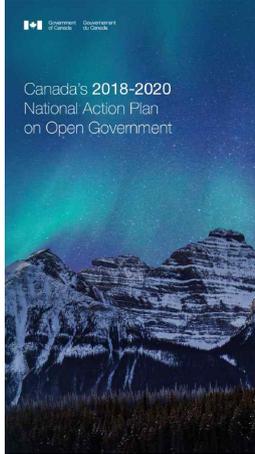
참고 6

지난 계획수립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구분	제4차 계획수립의 문제점	제5차 향후 수립 방향	실행 계획		
과제	계획의 방향성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국 비전 마련 ▶ TF 내 기획분과 구성 ▶ 방향성 등 사전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국 비전을 기반으로 주요 분야·과제 先 발굴 ▶ 기획분과(혁신기획과, 추진단, 행개련) 주도 방향성 제시 ▶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신규) 기관이 분과 정부위원으로 참여 ▶ 디지털 관련 기관 참여 		
	과제 간 연계성이 부족함			⇒	⇒
	행정안전부 과제 다수			▶ 다양한 기관의 참여	▶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신규) 기관이 분과 정부위원으로 참여
	국제 동향 고려하지 않음 예) 여성, 수익소유권 등			▶ 국제동향 파악, 과제포함	▶ 디지털 관련 기관 참여
절차	제안 선정 여부만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의프로세스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 분과 주도 논의를 통해 제안을 도전적이고 이행가능한 과제로 발전 		
	시민사회 제안 반영 부족			⇒	⇒
참여	참여 방법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협의체 참여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협의체 발굴·섭외 예) 청렴사회 민관협의체 		
	시민사회의 참여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시민사회단체를 선정해 (포럼 외) 단체의 창구 역할 부여 		
	정부기관 관심·의지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혁신 동력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정부혁신 과제 중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발전 가능한 2개년 과제 선정·발굴 		
체계	포럼 역할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 분과 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별 논의 수시 진행 		
	재정 지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을 위한 재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GP-WB 다자신탁기금 지원 검토 		

참고 7

캐나다(제9대 의장국) 2018-20 국가실행계획 개요

구분	주요 내용																																																																				
<p>보고서</p> 	<p>Annex A: Summary of Canada's 2018-2020 National Action Plan on Open Government</p> <p>Annex B: Gender-based analysis plus (GBA+) of national action plan commitments</p> <p>Annex C: How our identity affects our experiences: What is "intersectionality"?</p>	<p>Annex A: Summary of Canada's 2018-2020 National Action Plan on Open Government</p> <table border="1"> <thead> <tr> <th>Commitment</th> <th>Message</th> <th>Lead</th> </tr> </thead> <tbody> <tr> <td>1. Use-ready open government</td> <td>1.1 Make improvements to public websites to make it easier for users to find what they're looking for and contribute to the open government community</td> <td>•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td> </tr> <tr> <td></td> <td>1.2 Help Canadians learn about Canada's work in open government through working materials, information content, and enhanced training to public servants</td> <td>• Canada Chief of Public Safety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td> </tr> <tr> <td></td> <td>1.3 Improve the quality of open data available at open.canada.ca</td> <td>• Natural Resources Canada • Statistics Canada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td> </tr> <tr> <td>4. Expand the Open Government Policy</td> <td>4.1 Expand the Open Government Policy to make working documents from government officials open by default. Subject to applicable restrictions associated with privacy, confidentiality, and security</td> <td>•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td> </tr> <tr> <td></td> <td>4.2 Co-create a public, digital collaboration space where citizens and government employees can meet together</td> <td>•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td> </tr> <tr> <td></td> <td>4.3 Develop open data guidelines to protect the privacy of citizens, businesses, and institutions</td> <td>• Statistics Canada</td> </tr> <tr> <td></td> <td>4.4 Help Canadians understand the data and models used to design and study government programs</td> <td>•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td> </tr> <tr> <td>2. Financi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td> <td>2.1 Develop government budget and spending information easier for Canadians to find and understand</td> <td>• Department of Finance Canada</td> </tr> <tr> <td></td> <td>2.2 Publish the open.canada.ca/procurement for all new announced budget expenditures and for resources to future budgets</td> <td>•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td> </tr> <tr> <td></td> <td>2.3 Ensure Canadians have access to open data on government of Canada procurement</td> <td>•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td> </tr> </tbody> </table>	Commitment	Message	Lead	1. Use-ready open government	1.1 Make improvements to public websites to make it easier for users to find what they're looking for and contribute to the open government community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1.2 Help Canadians learn about Canada's work in open government through working materials, information content, and enhanced training to public servants	• Canada Chief of Public Safety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1.3 Improve the quality of open data available at open.canada.ca	• Natural Resources Canada • Statistics Canada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4. Expand the Open Government Policy	4.1 Expand the Open Government Policy to make working documents from government officials open by default. Subject to applicable restrictions associated with privacy, confidentiality, and security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4.2 Co-create a public, digital collaboration space where citizens and government employees can meet together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4.3 Develop open data guidelines to protect the privacy of citizens, businesses, and institutions	• Statistics Canada		4.4 Help Canadians understand the data and models used to design and study government programs	•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2. Financi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2.1 Develop government budget and spending information easier for Canadians to find and understand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2 Publish the open.canada.ca/procurement for all new announced budget expenditures and for resources to future budgets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3 Ensure Canadians have access to open data on government of Canada procurement	•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p>Annex B: Gender-based analysis plus (GBA+) of national action plan commitments</p> <table border="1"> <thead> <tr> <th>Commitment</th> <th>Message</th> <th>Lead</th> </tr> </thead> <tbody> <tr> <td>1. Use-ready open government</td> <td>1.1 Make improvements to public websites to make it easier for users to find what they're looking for and contribute to the open government community</td> <td>•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td> </tr> <tr> <td>Corporate</td> <td>1.2 Help Canadians learn about Canada's work in open government through working materials, information content, and enhanced training to public servants</td> <td>•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 Statistics Canada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td> </tr> <tr> <td></td> <td>1.3 Improve the quality of open data available at open.canada.ca</td> <td>• Statistics Canada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td> </tr> <tr> <td>4. Expand the Open Government Policy</td> <td>4.1 Expand the Open Government Policy to make working documents from government officials open by default. Subject to applicable restrictions associated with privacy, confidentiality, and security</td> <td>•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td> </tr> <tr> <td></td> <td>4.2 Co-create a public, digital collaboration space where citizens and government employees can meet together</td> <td>•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td> </tr> <tr> <td></td> <td>4.3 Develop open data guidelines to protect the privacy of citizens, businesses, and institutions</td> <td>• Statistics Canada</td> </tr> <tr> <td></td> <td>4.4 Help Canadians understand the data and models used to design and study government programs</td> <td>•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td> </tr> <tr> <td>2. Financi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td> <td>2.1 Develop government budget and spending information easier for Canadians to find and understand</td> <td>• Department of Finance Canada</td> </tr> <tr> <td></td> <td>2.2 Publish the open.canada.ca/procurement for all new announced budget expenditures and for resources to future budgets</td> <td>•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td> </tr> <tr> <td></td> <td>2.3 Ensure Canadians have access to open data on government of Canada procurement</td> <td>•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td> </tr> </tbody> </table>	Commitment	Message	Lead	1. Use-ready open government	1.1 Make improvements to public websites to make it easier for users to find what they're looking for and contribute to the open government community	•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Corporate	1.2 Help Canadians learn about Canada's work in open government through working materials, information content, and enhanced training to public servants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 Statistics Canada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1.3 Improve the quality of open data available at open.canada.ca	• Statistics Canada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4. Expand the Open Government Policy	4.1 Expand the Open Government Policy to make working documents from government officials open by default. Subject to applicable restrictions associated with privacy, confidentiality, and security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4.2 Co-create a public, digital collaboration space where citizens and government employees can meet together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4.3 Develop open data guidelines to protect the privacy of citizens, businesses, and institutions	• Statistics Canada		4.4 Help Canadians understand the data and models used to design and study government programs	•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2. Financi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2.1 Develop government budget and spending information easier for Canadians to find and understand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2 Publish the open.canada.ca/procurement for all new announced budget expenditures and for resources to future budgets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3 Ensure Canadians have access to open data on government of Canada procurement	•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Commitment	Message	Lead																																																																			
1. Use-ready open government	1.1 Make improvements to public websites to make it easier for users to find what they're looking for and contribute to the open government community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1.2 Help Canadians learn about Canada's work in open government through working materials, information content, and enhanced training to public servants	• Canada Chief of Public Safety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1.3 Improve the quality of open data available at open.canada.ca	• Natural Resources Canada • Statistics Canada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4. Expand the Open Government Policy	4.1 Expand the Open Government Policy to make working documents from government officials open by default. Subject to applicable restrictions associated with privacy, confidentiality, and security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4.2 Co-create a public, digital collaboration space where citizens and government employees can meet together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4.3 Develop open data guidelines to protect the privacy of citizens, businesses, and institutions	• Statistics Canada																																																																			
	4.4 Help Canadians understand the data and models used to design and study government programs	•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2. Financi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2.1 Develop government budget and spending information easier for Canadians to find and understand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2 Publish the open.canada.ca/procurement for all new announced budget expenditures and for resources to future budgets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3 Ensure Canadians have access to open data on government of Canada procurement	•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Commitment	Message	Lead																																																																			
1. Use-ready open government	1.1 Make improvements to public websites to make it easier for users to find what they're looking for and contribute to the open government community	•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Corporate	1.2 Help Canadians learn about Canada's work in open government through working materials, information content, and enhanced training to public servants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 Statistics Canada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1.3 Improve the quality of open data available at open.canada.ca	• Statistics Canada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4. Expand the Open Government Policy	4.1 Expand the Open Government Policy to make working documents from government officials open by default. Subject to applicable restrictions associated with privacy, confidentiality, and security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4.2 Co-create a public, digital collaboration space where citizens and government employees can meet together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4.3 Develop open data guidelines to protect the privacy of citizens, businesses, and institutions	• Statistics Canada																																																																			
	4.4 Help Canadians understand the data and models used to design and study government programs	•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2. Financi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2.1 Develop government budget and spending information easier for Canadians to find and understand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2 Publish the open.canada.ca/procurement for all new announced budget expenditures and for resources to future budgets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3 Ensure Canadians have access to open data on government of Canada procurement	•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표지	목록	공약 예																																																																		
공약 수	10개 공약, 56개 세부과제																																																																				
기관 수	18개(학교·재단 포함)																																																																				
수립기간	2017.11월 ~ 2018.4월 (6개월)																																																																				
의견수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오프라인 제안창구 개설 ▶ 캐나다 14개 도시에서 행사 개최 ▶ 트위터, 분야별 웨비나, 온라인 설문조사 등 SNS 활용 참여 유도 ▶ 이메일 또는 정부사이트(open.canada.ca) 제출 																																																																				
참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만여 명 참여 ▶ 약 5천 개 제안·의견 접수 ▶ 초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조회 당시 6백 개 의견 접수 																																																																				
수립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시민사회 초안 공동 작성 ▶ 3주간 대국민 의견조회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GP 주무부처(재무위원회) 총괄·기획 ▶ 열린 정부 민관협의체가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 및 토론을 지원 ▶ 민관협의체의 민간위원(8명)은 방향 설정, 신규 분야 및 과제 발굴 ▶ 전문가(4인)의 초안 검토 등 																																																																				
공약 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 친화적인 열린 정부 2.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3. 기업 투명성(수익소유권) 4. 디지털 정부 및 서비스 5. 열린 과학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건강한 민주주의 7. 정보 공개 8. 페미니스트 및 포용적인 대화 9. 화합 및 열린 정부 10. 열린 정부 커뮤니티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원칙 수립(포용, 성 평등, 접근성, 이용자 중심 생각, 화합, 협업) ▶ 의견수렴 중 내용을 'What We Heard' 보고서로 작성해 발간 ▶ 성 기반 분석 툴(GBA+) 활용해 최종 점검 																																																																				

□ 국제동향

1. 시민영역

OGP 회원국 중 엘살바도르는 시민사회단체 설립의 제약 조건을 줄이고, 캐나다는 단체 운영이 용이하도록 하며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라트비아는 시민사회단체가 편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왔다. 또한, 콜롬비아, 노르웨이, 크로아티아는 활동가, 기자 등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OGP 공약을 수립해 좋은 평가("ambitious")를 받았다.

2. 반부패

OGP는 아직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는 "열린 조달(open contracting)"과 "수익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끈 협의체이다.

1) 열린 조달의 경우, 입찰자와 계약자의 정보,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함으로써 재정 절약, 부패 척결, 중소기업의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콜롬비아는 식자재 공개 입찰을 통해 학식비를 감소했고, 나이지리아는 열린 조달을 위한 데이터 기준을 마련했으며, 알바니아는 여성 기업과의 열린 계약을 통해 포용성 또한 높였다. 2) 아울러 수익소유권 공약을 통해 덴마크, 케냐, 나이지리아, 영국은 기업의 소유주를 공개함으로써 불법자금유통과 자금세탁 방지에 기여해왔다.

3. 공공서비스

OGP 국가들은 국민의 의견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경험을 했다. 특히, 물과 위생, 보건, 교육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1) 우루과이는 물 사업에 국민참여 기제를 마련하고, 네덜란드 지방정부는 물 사업 지출 데이터를 활용해 인프라를 개발시켰다. 2)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으로 인해) 영국은 보건 데이터 개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OGP 회원국은 보건 사업 예산의 투명성과 성과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경우 지방정부의 보건 지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3)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에서 콜롬비아는 청년, 사회적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담아 향후 교육 정책에서 담아야 할 우선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몽골, 조지아(트빌리시)는 더 나은 학교 운영을 위해 국민이 학교를 감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열린정부 해외사례

분야	국가	과제
디지털·개방	파라과이	국민이 직접 수질·위생을 점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
	루마니아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전 온라인 시스템 구축
	영국	해외국제개발원조(ODA) 관련 데이터 투명하게 공개
	몽골	천연자원 추출기업 정보 및 계약정보 공개
반부패	영국	자국의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기업의 실소유주 등록제 도입
	나이지리아	
	덴마크	
	케냐	
	스페인	온라인상 로비스트 정보 등록 의무화
재정 투명성	미국	연방정부 재정 사용현황 홈페이지에 공개
	조지아	예산 정보 접근성 개선을 통한 책임성 확보
	스페인	예산의 용도를 시민이 정하는 'Let Madrid Decide'
	나이지리아	열린 조달을 위한 데이터 기준 마련
	콜롬비아	식자재 공개 입찰을 통한 학교 식비 감축
	프랑스	열린조달을 통한 재정 투명성 제고
참여·사회적 가치	뉴질랜드	입법 접근성 향상을 통한 국민의 권익 신장
	엘살바도르	시민사회단체 설립의 제약 조건 완화
	라트비아	시민사회단체의 펀딩 기회 마련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캐나다	성인지적 정책 수립을 위한 틀(GBA+) 개발
	콜롬비아	청년·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담은 교육 정책 수립
	알바니아	여성기업과의 열린 계약을 통한 포용성 제고
	노르웨이	활동가, 기자 등의 인권 보장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1. 중점 과제**■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

- 시민영역이 확보·확장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민 참여 활성화 경험을 공유하고 OGP 회원국의 경험을 확산할 수 있게 지원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참여 사례를 발굴·확산
- OGP 지방정부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OGP Local Strategy) 수립을 적극 지원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추구

- OGP 회원국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례를 발굴·확산
-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 OGP 국가실행계획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연계

■ 혁신을 통한 정부 신뢰 제고

- 회원국이 국가실행계획에 혁신 과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더 나은 정책 설계로 이어질 수 있는 평가 환류체계 마련
- 시민사회의장과 함께 국제사회가 추진한 반부패와 투명성 노력 강화
- OGP가 회원국의 데이터 활용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역량강화 플랫폼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정부와 국민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국가적 방안 마련

2. 국제적 리더십**■ OGP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향후 10년을 이끌 비전 공동 수립****■ OECD, UN 등 협력기관과의 열린 정부 구현 활동 연계****■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의체를 구축해 역내 열린 정부 구현 노력 확대****3. 국내 활동****■ 열린 정부 가치를 확산하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활동 강화****■ 대한민국의 국가실행계획에 열린 정부 과제 마련 지속****■ 정부혁신 추진을 통한 범정부 열린 정부 활동 내실화****4. 대외 협업****■ 외교부 등과의 협업을 통한 OGP 의장국 활동 추진****■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정부기관의 OGP 활동 참여 확대**

1. (중점과제) 의장국 임기 중 OGP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자 하는 중점과제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열린 정부 활동을 주도하는 '열린정부파트너십(OPG)'을 2019-21년 동안 이끌 공동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2011년 UN 총회에서 씨앗을 틔워 8개 국가로 출발한 OGP는 이제 79개국, 20개 지방정부, 수천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4천개에 다다른 과제를 수립해 이행하는 국제협약체로 성장했다. 곧 출범 10년을 맞이하는 OGP는 그동안 국제사회 내 열린 정부의 현주소를 짚어주고, 앞으로 갈 길을 비춰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2019-21년 OGP 공동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2019-20년 의장국 아르헨티나 정부와 시민사회 의장 로빈 호데스(Robin Hodess) 의 활동을 지원하고, 다음 해 의장국으로 승격해 시민사회 의장 마리아 바론(Maria Baron)과 함께 투명성 증진,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ICT 활용에 기여할 것이다.

OGP는 그동안 시민영역 확장,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국제협약체로서 자리매김 해왔다. 이러한 국제적 도전과제에 대해 OGP 운영위원회는 공동 리더십을 추구하는 'OGP 운영위원회 행동지침¹⁾'을 승인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열린 정부는 다른 국제 파트너 기관에서도 접할 수 있다. OECD는 '열린 정부에 관한 이사회 권고문²⁾'에서 열린 정부를 신뢰 구축의 주요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국제투명성기구 2020 전략³⁾은 정부가 열린 정부를 구현할 때 교육, 보건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더 높다고 설명한다.

1) OGP (2019), OGP Steering Committee Call to Action: Collective Leadership to Protect Participation, Advance Inclusion, and Create Impact for Digital Democracy

2) OECD (2017),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Open Government, <http://acts.oecd.org>

3)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5), Together Against Corruption – Transparency International Strategy 2020, https://issuu.com/transparencyinternational/docs/togetheragainstcorruption_strategy2/6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직면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OGP와 국제사회의 열린 정부 활동을 이끌 의장국으로서 OGP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3가지 중점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

시민참여는 민주주의, 열린 정부,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는 핵심요소이다. 정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전례 없이 발생하고,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 간의 쌍방향 소통과 협력적 거버넌스다. 따라서 시민참여가 사회·지역문제 해결의 기반을 구축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과제에 역점을 둘 것이다.

- ▶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시민영역이 확보·확장될 수 있도록 OGP 회원국과 협력할 것이며,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회복한 대한민국의 경험과 국민 참여 플랫폼의 운영 노하우를 세계 여러 나라와 공유할 것이다. 아울러, OGP 회원국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한 경험을 확산해 국내외 시민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수의 국가가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 정부로 전환하고 있다. 참여 기제에 있어서도 오프라인 뿐 만 아니라 디지털에 기반 한 참여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겠다.
- ▶ 정책 과정 상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서의 시민참여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과 접점이 많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OGP 지방정부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추구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적 가치창출과 더불어 국정운영 방식을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권·노동권·안전·사회적 약자 배려·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을 위해 정부운영 기반을 혁신하는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대한민국은 OGP 회원국이 열린 정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할 것이다. 아울러, 회원국마다 처한 정책 여건이 다르고 정책 목표가 상이한 것을 감안해서 OGP가 회원들 간 모범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정리해서 회원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 ▶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응성이 중요하다.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열린 정부를 위한 민관협의체의 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 ▶ OGP 회원국이 수립하는 국가실행계획이 **UN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연계**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OGP가 국제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국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혁신을 통한 정부 신뢰 제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정부혁신은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며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범정부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혁신 노력이 국제사회에 확산되어 열린 정부 노력에 기여하고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 대한민국 정부는 OGP 회원국이 혁신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실행계획 내 혁신과제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OGP 독립연구기관의 평가를 통해 회원국의 성과가 더 나은 정책 설계로 이어질 수 있는 환류체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 대한민국 정부는 OGP와 국제사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분야의 반부패와 투명성 증진 노력에 힘을 실을 것이다. 공직윤리 강화, 불공정·부조리 척결 등 행정 분야의 청렴성을 넘어 입법·사법·민간의 반부패 노력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장과 협력할 것이다.
- ▶ 디지털 전환이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 한 과학적 정책결정을 통해 유능한 정부로 신뢰받으려 노력한다. 따라서 OGP 회원국이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OGP를 역량강화 플랫폼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겠다. 또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사회적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OGP 차원의 범국가적 방안을 모색하겠다.

대한민국 정부는 열린 정부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닌,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OGP와 회원국의 성과를 발굴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이 강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역대 의장국의 활동 덕분에 열린 정부는 지금까지 열린 정부의 철학과 개념, 정책적 틀과 세부 프로그램을 구축하였고 다양한 정책분야의 투명성, 반부패, 시민참여를 주도해왔다. 그 제도적 유산과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OGP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용하고, 열린 정부를 이행하도록 돕는 책임성 있는 플랫폼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OGP를 대표해 활동할 것이다.

2. (국제적 리더십)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취할 것인지? 아울러, 운영위원회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2021년은 OGP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OGP가 성장해 온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10년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을 운영위원회와 함께 수립하고자 한다.

열린 정부의 국제적 담론에 동참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UN, OECD 등 다양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OECD 공공행정위원회 소속 열린정부 실무단과 공공데이터 전문가그룹에 참여해 열린 정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OECD 등 OGP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OGP의 활동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공공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OG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를 개최해 열린 정부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연대를 구축하기도 했다. 그 노력에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OGP 참여 확대를 통해 선진국의 공공행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별 협의체를 구축하여 역내 공동 노력을 강화하고, 다수이해관계자포럼 간 네트워크를 통해 열린 정부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각국의 열린 정부 활동을 평가해온 독립보고메커니즘의 평가체계에 동료검토를 적용해 정보와 지식의 허브로 육성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국가이다. GDP 세계 12위, 국민소득 3만 불인 경제국가로 성장하기까지 다양한 경제 상황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열린 정부 활동을 앞장서는 것으로 기여할 것이다.

3. (국내 활동) 국내 열린 정부 과제를 추진하고 모범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은?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정책문제들을 경험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정책을 둘러싼 데이터·정보·지식·경험·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공가치 및 공동창조를 구현하는 혁신생태계로의 진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열린 정부 가치를 확산하고,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열린 정부 활동의 외연 확장과 효과적인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일회적인 협력이 아닌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해 청년과 데이터 활용 개발자 중심인 워킹그룹을 운영해 열린 정부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포럼이 정부와 민간 영역 간의 협력체로서 OGP 회원국과도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은 2018-20년 이행중인 제4차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관협력 부패방지 체계 확립, 정책제안 플랫폼 '열린소통포럼' 운영,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등 13개 과제의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다음 국가실행계획에서는 사회문제를 집단지성과 시민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야심찬 과제를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민관협의체 '정부혁신 추진협의회'와 국민으로 구성된 '정부혁신 국민포럼'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부기관의 참여와 열린 정부 활동을 내실화할 것이다.

4. (대의 협업) 의장국 활동을 이끌 주무부처는? OGP 가치와 OGP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실), 외교부, 타 기관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대한민국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2019-21 OGP 공동의장국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2011년 OGP 출범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OGP 가입을 주도해 온 행정안전부는 네 차례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10월 운영위원회에 진출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OGP가 국제적인 열린 정부 플랫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요 기관과 협업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의 정부위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서울특별시 등 국내 열린 정부 활동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 안에서 지속 협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경험과 역량도 공유하겠다.

OGP 의장 활동을 이끌 주무부처이자 대한민국 정부혁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범정부적 혁신 노력을 OGP의 활동과 연계해 국내 열린 정부 활동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OGP Steering Committee Co-Chairmanship Priorities Not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 What priorities will your government drive during its OGP chairmanship to advance OGP goal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elected as the Co-Chair of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for the 2019-21 years. During its chairmanship, Korea will support Chairs, the Government of Argentina and Robin Hodess from The B Team, for the first year and work in close partnership with civil society Co-Chair Maria Baron from Directorio Legislativo to promote transparency, empower citizens, fight corruption and harness new technologies to strengthen governance.

The OGP, launched with 8 member countries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11, has grown to 79 countries and a growing number of local governments along with thousand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developed nearly 4,000 open government commitments through more than 100 biennial action plans. At the forefront of pursuing open government, the OGP has been supporting governments in expanding civic space, renewing citizen trust and deepening democracy with the help of digital technologi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open government as a way to reinforce the efforts, the OGP Steering Committee approved the Call to Action¹ to protect participation, advance inclusion and create impact for digital democracy. Open government has been also identified in partner organizations. The OECD, in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Open Government², recognizes open government as critical to building citizen trust, and Transparency International writes in the Strategy 2020³ that citizens in countries that are open and accountable enjoy better education and health.

As the Co-Chair of the OGP,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drive the OGP to focus on the following three key priorities:

1. Promoting Participatory Democracy at All Levels

Citizen participation is one of the critical elements in pursuing democracy, open government and inclusive growth. With emerging problems that the government alone

¹ OGP (2019), OGP Steering Committee Call to Action: Collective Leadership to Protect Participation, Advance Inclusion, and Create Impact for Digital Democracy

² OECD (2017),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Open Government, <http://acts.oecd.org>

³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5), Together Against Corruption - Transparency International Strategy 2020, https://issuu.com/transparencyminternational/docs/togetheragainstcorruption_strategy2/6

cannot resolve, we need co-creation between governments and citizens, and a platform that supports the collective efforts. In order to ensure that citizen participation is a key driver of problem-solving, as a Co-Chair of the OGP, Korea will:

- Work with governments to **secure and expand civic space** and share experience and insight in operating citizen participation platforms to make a greater impact.
- Identify and disseminate **citizen participation cases enhanced by digital technologies** as many government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igital transformation that goes beyond e-government.
- Ensure that governments **support national-local vertical integration**. As part of the efforts, Korea will support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OGP Local Strategy and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2. Pursuing Public Values towards an Inclusive Stat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ursues a public-value-oriented governance to promote a healthy society and benefit communities and society as a whole, by ensuring human rights, labor rights, safety, inclusion of marginalized people and the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participation. Taking continuous efforts, Korea will:

- Support countries in **pursuing public values through open government**. Considering that each country has different context and objectives, Korea will ensure that there is no single vision, no one-fits-all approach by leaving room for governments to contextualize the way of pursuing open government.
- Strengthen the work of multi-stakeholder forums to **enhance governments' responsiveness to the needs of citizens**.
- Help OGP member countries develop Action Plans (AP) that deliver **commitments aligned with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⁴**, and lead global efforts to make OGP as a public-value-oriented platform.

3. Renewing Trust through Government Innovation

To achieve our government objective, *a Government of the People*, and an innovative, inclusive stat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signed 'Government Innovation Strategy.' The cross-government strategy aims to realize public values; promot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nd build a trustworthy government. Taking a further step towards global open government efforts, Korea will:

⁴ UN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

- Help OGP member countries design **government innovation commitments in APs**. In particular, Korea will work with the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IRM) to make assessment reports conducive to making better policies.
- Reinforce **global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efforts** in partnership with our civil society Co-Chair, not only in the executive branch that strengthens public servants' ethics and eliminates injustice and irregularities but also in the legislative, judiciary branches and the private sector.
- Make capacity-building opportunities in the OGP that helps countries increase their **capabilities of using data for problem-solving**. It is because, responding to digital transformation, many governments seek for appropriate - or perhaps more customized - ways to make data-driven, scientific decisions. By doing so, OGP can help countries solve wicked problems in a more co-creative way.

As a Co-Chair of the OGP, Korea will take efforts to ensure that open government is perceived not as an end itself but as a means to make positive changes in citizens' everyday lives. Besides identifying the outcome of OGP activities, Korea will strengthen the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for sustainability. Thanks to the work of former Co-Chairs and the Support Unit, OGP has raised awareness about open government values and principles and designed tools and mechanism. Building on what has been done for the past years, Korea will work to embrace diverse stakeholders and engage OGP in diverse global platforms as a key implementation and accountability platform that advances open government reforms.

2. How will your government demonstrate leadership of OGP at the international level during your chairmanship, and what actions can it take to foster a more cohesive leadership body within the Steering Committee?

The year 2021, chair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aria Baron from Directorio Legislativo,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OGP. With the achievement made by the OGP, Korea proposes to the Steering Committee to design a strategy that reflects lessons learnt for the past decade and looks ahead to identify our role.

As an active country in the wor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nd OECD, Korea will work to demonstrate leadership of OGP at the international level. Korea has been an OECD member since 1996 and part of the open government initiatives that achieve measurable impacts in the Working Party on Open Government of the Public Governance Committee. Working with partners of the OGP, Korea will identify areas of collaboration that can advance OGP's goals.

The Moon administration created a ROK-ASEAN network through the New Southern Policy to share experience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enhance democratic values in the region. Furthermore, Korea hosted the OGP Asia-Pacific Regional Meeting 2018 to raise collective ambition and generate new political support for open government. Taking continuous efforts, Korea will ensure that OGP provides a platform for the exchange of knowledge and good practices; regional networks of multi-stakeholder forums; evidence-based learning opportunities through peer review.

As the only country that has transformed from a recipien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a donor, Korea is well positioned to share public administration experience at diverse income levels it has gained throughout the journey to become the world's 12th largest economy with more than \$30,000 GDP per capita.

3. How do you plan to further advance your domestic open government agenda and lead by example during your chairmanship role?

A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and its lived experience is critical to pursuing open government. The partnership should co-create in an innovative, sound environment that pursues public values based on data, information, knowledge, experience and network. In efforts to build the partnership, Korea designed a multi-stakeholder forum 'Open Government Forum Korea' that aims to pursue open government values and principles and design ways for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o work together in various policy and thematic areas.

The Forum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expanding the scope of partnership continuously and taking long-term approaches rather than project-based, short-term ones. As part of the efforts, the Forum has created working groups for the youth and open data advocates for more specific issues. Korea will continuously support the work of the Forum and find ways for OGP multi-stakeholder forums to learn from each other.

Open Government Forum Korea designed the 4th Action Plan 2018-20 with 13 commitments including disclosure of priority data; open communication forum the Gwanghwamoon 1st Street;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anti-corruption. Starting from March 2020, the Forum will start to design the 5th Action Plan and make more ambitious open government commitments through collective intelligence and citizen participation.

Furthermore, Korea will expand the scope of partnership by working with government innovation citizen forum and government innovation committee composed of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academia.

4. Which Ministry will lead your OGP chairmanship (if different from current OGP Ministry)? How do you envision the role and involvement of other government bodies, including your head of state/government, foreign ministry and diplomatic networks, and other ministries to advance your OGP priorities and promote OGP globall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will lead Korea's OGP chairmanship for 2019-21. As a lead ministry for Korea's OGP activities since joining the OGP in 2011, MOIS has designed four APs and represented Korea as a member of the OGP Steering Committee since October 2017.

MOIS will continuously work with line ministries to present OGP as a key international open government platform. The Open Government Forum Korea, Korea's multi-stakeholder forum for open government, will be a platform for MOIS to work strategically with government organizations including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Forum will lead domestic open government activities including designing, implementing and monitoring national action plans and also internationally promote open government efforts made in Korea. For capacity-building opportunities for open government practitioners home and abroad, Korea will cooperate with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MOIS, the lead ministry of Korea's OGP chairmanship and government innovation, will pursue government innovation as a driver of open government and push open government forward in a whole-of-government approach.